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관련 체계 연구

2022-04

수시연구

A Study on the In-kind Payment System
& Scheme with Artwork for Inheritance Tax

변지혜
김혜인
이재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관련 체계 연구

A Study on the In-kind Payment System & Scheme with Artwork for
Inheritance Tax

변지혜·김혜인·이재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외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관련 체계 연구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금전 납세 대신 국민의 문화적 향유 지원을 통해 특정계층, 특정 집단의 미술품 소유를 국가가 보유, 활용하여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입이 결정됨
-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이후 별도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의 운영 체계 및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이 이진희 컬렉션 기증 및 전시와 맞물리면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부자 감세의 방식이라는 논쟁과 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쟁점이 되고 있음
 - 금전 납부의 원칙인 국세의 납부에 있어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에 의해 납세할 금전 가치에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가 상응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는 국가가 문화재의 가치를 심의 의결하여 공인하는 효과가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미술품 가치 평가를 공인하기에 앞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신뢰할 만한 공적 가치 평가 방식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된 세법에 맞추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제안하고, 물납제도 운영의 주요 쟁점인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를 위한 심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법제도의 구조를 파악하고, 개정사항을 검토 파악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운영 체계를 운영 주체, 추진 체계, 심의 평가 체계를 현황 파악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 고려 사항을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의 유사 사례를 분석 검토함

- 사례 분석에 기반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운영 방향성을 제안하고 그에 맞는 운영 방안을 제안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내용적 범위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방식의 특례이므로 연구의 범위는 상속세의 부과 및 납부 범위를 검토하고, 국제 납부 방법으로서의 물납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검토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및 제도에 기반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을 심의, 평가하는 제도를 검토함

■ 공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관한 공적 심의의 분석은 국내 문화재 및 미술품, 혹은 타 부처의 문화 기반 시설 상 수집, 국가 귀속하는 물품에 대한 심의 체계를 그 범위로 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실제 운영 사례는 대표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일본을 검토하되, 유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외 국가들을 포함함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수집 가능한 자료 분석(물납제도의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 물납제도 및 유사 제도의 법안 및 연구 자료, 정책 부서에서 공개하고 있는 유사 제도의 자료 등)과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의 평가, 심의를 담당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 회의를 활용하여 수행함

3. 문화재 및 미술품 제도

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관련 법 제도

- 문화재 및 미술품은 상속세에 국한하여 세액의 납부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물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임

- 상속세를 비롯한 납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임
- 일부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물납 물품이 환금성에 기반하여 납부 후 매각을 통해 세금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물납 대상을 제외하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서는 납세자의 물납 요건과, 물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물납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명시하고 있음

나. 운영 체계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의 운영은 납세를 소관하는 세무서, 물납의 심의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물납 후 물납된 문화재 및 미술품을 배치하는 기획재정부가 해당함
- 물납의 운영 추진 체계는 소관 주체별 납세-심의-수납 및 활용 등의 절차별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업무는 업무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근본적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은 납세제도이기 때문에 전체 물납의 총괄은 소관 세무서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물납 재산의 가격, 예술적, 학술적 가치, 활용 가치 등을 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심의 평가 체계의 마련은 물납제도의 특성상 여러 부처 간 협력하여 심의, 의결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협력 위원회의 형태로 구성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세액의 평가는 납세자의 신고에 기반하며, 이에 대한 탈루,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내에 평가심의 위원회가 평가하기도 하나 평가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금전적 평가가 용이한 재산을 대상으로 함

4. 주요 고려 사항

가. 주요 쟁점

- 물납 대상이 되는 문화재와 미술품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나 박물관에서의 소장 가치가 있는 박물관 자료, 미술 자료, 미술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 방식은 기존의 감정에서의 가격 감정과 가치 평가 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평가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재산에 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나,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거의 없음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재화의 평가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전문성을 요함에 따라 미술품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아닌 문화재 및 미술품의 전문가가 감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사례 분석

- 내용 국내 사례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제도에 기반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문화재 및 미술품의 수집, 기증 등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유형을 지님
 - 이에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이응노미술관 등의 사례를 통해 제도 기반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심의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및 물납제도 도입에 관한 쟁점 의견을 정리함
- 국외 물납제도
 - 우리는 이제 도입되는 물납제도이지만 해외의 주요국가는 이미 문화재 및 미술

품 물납제도를 선행적으로 운영해옴에 따라 영국, 일본, 프랑스를 대표국가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물납제도의 운영과 고려 사항을 검토함

- 분석은 물납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향, 운영 체계, 물납 심의 위원에 관한 사항, 물납 가치 평가의 보완책 등을 통해 물납제도 등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함

5.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운영 체계 제안

가. 물납체계 추진 방향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문화적 혜택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임
 - 그러므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이 분명 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향유 가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일반의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세금 대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매우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에 국한하여 본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 물납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영국은 매해 보고서 발간을 통해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며 프랑스의 경우 유명 미술 작품을 물납 대상으로 하여 물납 성과가 물납 대상 그 자체로 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기반 시설을 마련하여 직접적 향유로 이어지게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 간의 협력과 소통에 기반하여야 함
 -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특성상 심의에 필요한 부처 간의 의견과 검토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물납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협력적 방향성을 도출 하여야 함
- 공정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 심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적합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선정이 중요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심의 전문가는 미술 시장과는 다른 학술적, 예술적 가치 외에도 문화 향유에 대한 가치를 상호 고려할 수 있는 평가자가 선정되어야 함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정책 및 심의를 지속해 오며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미술품의 경우 미술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의 풀을 지닌 유사 공적 심의 체계 사례 등의 협조 또는 연계가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의 활용 방안 고려가 필요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심의 단계에서 문화 기반 시설의 여건상 관리가 어렵거나, 기소장품과 중복되는 등의 국민 향유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 활용처가 보다 분명하고 활용 가치 또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용해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은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따라 다양한 변수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 단계적으로 물납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적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나. 물납체계 운영 방안

- 물납제도는 물납 심의에 관한 사항만이 추가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 심의사항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물납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문화재 및 미술품의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물납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럴 경우 물납 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도 물납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부처 간의 제도 협의를 이끌며, 물납제도의 효과를 도출하는 물납 활용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여야 함
- 물납 심의 운영 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물납의 허용에 관한 여러 소관 부처 및 전문가가 모두 모여 심의, 의결하는 형태로 구성함
- 물납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내용의 검토, 의미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문화재와 미술품의 분과 위원회를 두어 물납에 관한

가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물납 신청자는 물납 신청 단계에서 물납 심의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물납 신청자는 자신이 제출한 물납 신청 가액과 책정에 대한 근거, 소유권에 관한 증명, 작품의 감정, 작품의 이력에 관한 사항, 보존 상태 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대리인의 선임을 통해 제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시 민간 감정 업체의 감정은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감정서상에 감정자, 감정자의 의견, 산출 및 평가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6. 결론 및 제언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문화재와 미술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적 체계로 작동하여야 함
-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 유관 부처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물납 심의제도는 이러한 부처 간의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단번에 물납제도를 완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물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쟁점과 양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개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체계를 확립하여 나가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상속세에만 국한하여 제한적이며, 국가가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을 보유하고 문화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납세제도 전반에 걸쳐 유사 납세제도의 도입을 함께 고려하여 볼 수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의 제도적 안정화와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때로는 공공차원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감정에 대한 공적 인정 등을 통해 감정 분야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미술품 거래 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노력이 필요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은 원소유자가 사망하여야 상속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 납세의무자는 상속 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움
- 물납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미술품 매매 시 작품에 관한 정보 및 매매 이력 정보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서론	3
1. 논의 배경	3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목적	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9
 제2장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 현황	11
제1절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관련 법 제도	13
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의 납세제도 분석	1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	20
제2절 물납제도 심의 운영 체계	25
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체계상 운영 주체	25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절차에 대한 운영 추진 체계	28
3.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필요 여부에 관한 심의 평가 체계	29
 제3장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 주요 고려 사항	37
제1절 주요 쟁점	39
1. 물납 대상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범위	39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허가의 기준	41
3.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격 가치 평가의 감정에 관한 사항	42
제2절 사례 분석	44
1. 국내 사례	44
2. 국외 물납제도	57

제4장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운영 체계 제언 71

제1절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체계 추진 방향	73
1. 기본 방향	73
2. 제도 운영 방향	73
제2절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운영 체계 및 방안	77
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 운영 체계	77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절차에 대한 운영 추진 체계	80
3. 기타 논의 사항	85

제5장 결론 및 제언 91

제1절 요약	93
1. 문화재 및 미술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적 체계 확립	93
2. 부처 간 협력 제도로의 거버넌스 구축	93
3. 물납제도의 단계적 체계 확대	94
제2절 정책적 제언	95
1.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의 논의	95
2. 물납 체계의 단계별 제도 개선	96
3. 물납제도 감정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99
4. 미술품 거래 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1
5. 물납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방안 마련	102

참고문헌 / 103

ABSTRACT / 107

표 목차

〈표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4
〈표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법률 안	5
〈표 2-1〉 위원회 유형 : 자문위원회	31
〈표 2-2〉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의 내용	33
〈표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술품 평가에 관한 사항	35
〈표 3-1〉 사례 분석 기관 및 심의	44
〈표 3-2〉 국내 문화재 등 심의 제도 비교	56
〈표 3-3〉 일본 미술품 물납 우선 총당순위	59
〈표 3-4〉 일본 등록 미술품 제도	62
〈표 3-5〉 국외 물납제도 비교 요약	69
〈표 4-1〉 영국 물납 신청 시 자료 제출 사항	86
〈표 4-2〉 일본 등록 미술품 제도 신청 시 자료 제출 사항	86
〈표 4-3〉 프랑스 미술품 물납 시 자료 제출 사항	87
〈표 4-4〉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신청시 필요 자료 제출 사항	88
〈표 4-5〉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신청 시 필수 제출 사항	89
〈표 5-1〉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부서별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비스 현황	99

그림 목차

[그림 2-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납세제도상 범위	14
[그림 2-2]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운영 구조	15
[그림 2-3] 상속세 과세 세부 체계	15
[그림 2-4] 현행 조세징수 수단인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8
[그림 2-5] 상속세 납부 방식 및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관계도	20
[그림 2-6] 상속세 및 물납 체계에 따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절차	24
[그림 2-7] 국세 물납 체계	28
[그림 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기반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운영 체계	29
[그림 2-9]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근거한 위원회의 구분	30
[그림 2-10]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협력 운영 체계	32
[그림 3-1]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회 소관 부서	45
[그림 3-2] 문화재위원회 조직 및 위원 구성	46
[그림 3-3] 국립중앙박물관 수증심의 운영 체계	49
[그림 3-4] 정부미술은행 심의 체계	51
[그림 3-5] 정부미술은행 심의 방식	52
[그림 3-6] 과학기술자료 심의 체계	54
[그림 3-7]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운영 절차	55
[그림 3-7] 영국 미술품 물납체계 운영도	60
[그림 3-8] 등록 미술품의 물납 순서	63
[그림 3-8] 2021 AIL 물납 연간 보고서 부분	66
[그림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물납 체계도	77
[그림 4-2] [그림 4-1]을 토대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체계에서의 물납 재산의 활용을 운영 체계에 포함하여 재정리한 물납체계 제안 안	78
[그림 4-3]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관련 업무 소관 사항	79
[그림 4-4] 물납제도 운영 흐름 안	84
[그림 4-5] 물납 운영 추진 체계 안	85
[그림 4-6] 민간 감정기관의 감정서 사례	90

[그림 4-7] 국외 감정서 사례	90
[그림 5-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 향후 범위 설정 방향 안	98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관련 체계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1. 논의 배경

1)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의 대두

- 2014년 「미술진흥증장기계획(2014~2018)」에서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차원에서 미술품 물납제도의 제안이 있었으며, 「미술진흥증장기계획(2018~2022)», 「문화비전2030」 등에서도 재차 등장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 시장의 활성화와 미술 진흥의 목적으로 검토되어 왔음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빈부격차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액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부유층으로 하여금 문화적 차원에서 공공에게 이익을 주는 형태의 납세를 통해 공익적 자본주의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정준모, 2020)
- 국가는 문화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조세제도는 국가가 빈부 격차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므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조세제도가 국가의 문화적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적인 조세제도임(정준모, 2020)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또한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의 한정된 예산으로 수집할 수 없는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통해 지역 내 문화의 질에 대한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임(양현미, 2017)
- 또한 물납제도는 제도상 물납에서의 미술품 평가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미술 시장의 투명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이동기, 2019)
- 2020년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의 별세로 유가족이 2020년 5월 상속세 재

원 마련과 재정난 해결을 위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매입함

- 이를 계기로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의 필요성이 야기됨
- 이후 2021년 문체부는 「미술생태계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방안 연구」를 토대로 미술진흥법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다루는 토론회 개최 및 미술진흥법 도입을 검토함
- 높은 가치를 지닌 미술품의 소장자는 세금 납부의 의무에 따라 보유하는 재산 중 미술품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매각 시 필요에 따라 국외에서 매각할 수 있기도 함.
- 우수한 미술품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가 이를 보유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유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됨
- 미술진흥법은 통과되지 못하였으나, 2021년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하게 되었음

〈표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시행 도입 예정

-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이후 별도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의 운영 체계 및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2021년 12월 이달곤 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심의의 추진 체계로 심의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법안 제안하였으나 국회 계류 중에 있음

〈표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법률 안

현행	개정안
〈신설〉	<p>제8조의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위원회의 설치)</p> <p>①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 중 국가적, 인류사적으로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있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문화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물납 대상의 국가적·인류사적 보존 및 관리 필요성 3. 물납 대상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평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등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기재출된 법안의 통과 여부와는 별도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가 2023.1.1.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물납 심의 위원회 외의 논의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에 대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물납의 요건, 관할 부처 및 물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고 있으며 물납 대상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함
- 2021년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미술품 물납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세법이 개정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2021. 12. 발의)이 국회 계류 중에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시행일이 공고되었음에도,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물납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와 방안은 개정법률안과는 별도로 추진 마련되어야 함

3) 부자 감세를 위한 수단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이전부터 지속 논의되어 왔으며, 삼성 이진희 회장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발생과, 유족 측의 미술품 기증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이 결정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이 이진희 컬렉션 기증 및 전시와 맞물리면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부자 감세의 방식이라는 논쟁과 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쟁점이 되고 있음
- 금전 납부의 원칙인 국세의 납부에 있어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에 의해 납세할 금전 가치에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가 상응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으로의 역할 강화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금전 납세 대신 국민의 문화적 향유 지원을 통해 특정계층, 특정 집단의 미술품 소유를 국가가 보유, 활용하여 전국민에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임
- 국민의 납세에 기반하여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연간 예산 규모를 두고 문화재 및 미술 작품을 수집하여 국민이 전시나 교육을 통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일수록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작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는 이러한 뛰어난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여 국민이 양질의 문화재 및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납제도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5) 공정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 방안의 마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공정하고 합당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중섭 작가의 경우 2005년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작품 중 4점이 서울옥션에서 3억여 원에 낙찰되었으나 위작으로 밝혀졌으며, 유족이 소장하던 나머지 3,000여 점도 위작으로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됨
- 박수근의 <빨래터>의 경우 국내 감정 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서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가짜 가능성을 제기한 측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미술품 감정에 대한 신뢰 문제는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음
- 국내 감정기관이 출처 확인과 안목 감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에 따르는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는 국가가 문화재의 가치를 심의 의결하여 공인하는 효과가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미술품 가치 평가를 공인하기에 앞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감정평가와는 구분되는 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평가 방식을 마련하여야 함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목적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물납제도의 도입에 관한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양현미는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한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물납의 필요성을 지역 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양현미, 2017), 장영환은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차원에서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납세자의 편의, 전국민의 문화 향유,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 효용 가치 등으로 제시하였음(장영환, 2020)
- 정준모는 문화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세 제도가 문화, 예술의 보호 및 향유의 확대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주요 조세 제도로 약정 매매제도, 문화기증제도, 기부금제도 등과 함께 물납제도를 제시하였음
-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물납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나 실제 물납제도의 운영에 있어 국내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논의 확대하지는 못하였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이후 이루어진 연구는 이경택, 이지현, 김선영(2022)의 물납제에 대한 선결과제에 대한 연구로 미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납제 시행을 위한 조건의 의견을 검토하였음
- 본 연구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의 실제 운영에 관한 쟁점을 고려하여 실제 운영에 필요한 체계의 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 취지를 넘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일환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검토 사항 및 쟁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물납 제도와는 다른 지점을 검토하여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그동안 물납 제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검토를 확장하여 제도를 둘러싼 관계부처를 통합하여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내용적 범위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방식의 특례이므로 연구의 범위는 상속세의 부과 및 납부 범위를 검토하고, 국세 납부 방법으로서의 물납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검토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및 제도에 기반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을 심의, 평가하는 제도를 검토함

나. 공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관한 공적 심의의 분석은 국내 문화재 및 미술품, 혹은 타 부처의 문화 기반 시설 상 수집, 국가 귀속하는 물품에 대한 심의 체계를 그 범위로 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실제 운영 사례는 대표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일본을 검토하되, 유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외 국가들을 포함함

2. 연구 방법

가. 문헌 조사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에 관한 필요성과 물납제와 관련한 담론의 변화 및 선결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함

- 특히 미술품에 관한 평가를 둘러싼 제도, 쟁점, 평가 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발간 정책보고서 및 학술논문과 함께, 타 부처 공공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보고서와 국외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회의록, 정책 안내서, 법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

나. 사례 조사

- 문화재 및 미술품의 평가 및 심의의 방법과 고려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의 평가, 심의에 관한 주요 국내 사례를 조사 연구함
- 물납제도를 기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물납제도 운영 체계와 관련하여 법, 운영 소관 부처 및 소관 관리 웹사이트 및 기타 발간 자료 등을 토대로 사례 조사하고 그 성과를 비교 분석함

다. 전문가 의견 조사

- 문화재 및 미술품과 관련한 유사 심의 체계의 운영 담당자를 만나 사례의 현황을 조사하고 담당자 의견을 조사하여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물납제 도입시 논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박물관, 미술관 수증 담당 전문가
 - 유사 제도 및 심의 담당 전문가
 - 유관 기관 유사 제도 담당 전문가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심의와 관련하여 유관 전문가들을 만나 물납제도 시행 시 발생할 주요 쟁점 및 논의 지점을 발굴 검토하고,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감정 분야 전문가
 - 미술 시장 및 예술경영 분야 전문가
 - 박물관, 미술관 분야 전문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관련 심의 체계 연구

제2장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 현황

제1절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관련 법 제도

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의 납세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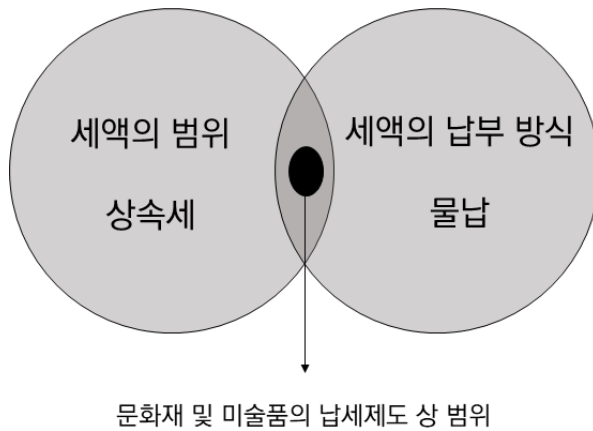
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범위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국유 재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가가 보유,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납세자가 금전 납부가 아닌 세액을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그러므로 납세제도의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특례로 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2를 신설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률 제 73조의 2에 따라 상속세에 한하여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여세에는 해당하지 않음
-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개정 법률에서는 물납 신청의 근거, 물납의 검토 절차, 물납의 신청 요건 및 제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의 신청 가능한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물납의 허가 여부는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납세관청의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제도임
- 이에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금납부제도와 물납이라는 납부 방식에 대한 공통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나. 상속세액 과세 체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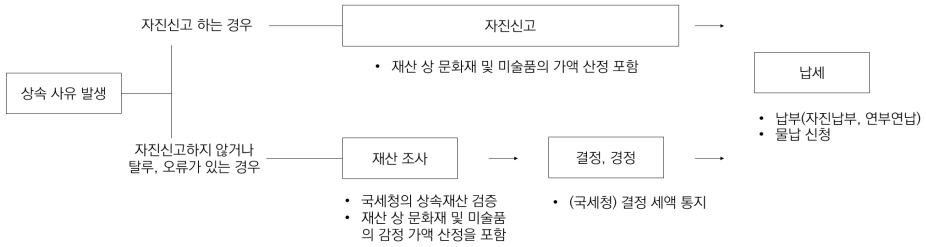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과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과세 및 납부 절차와 체계 내에 운영되는 제도임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함
- 이 가운데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은 상속세에 국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그림 2-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납세제도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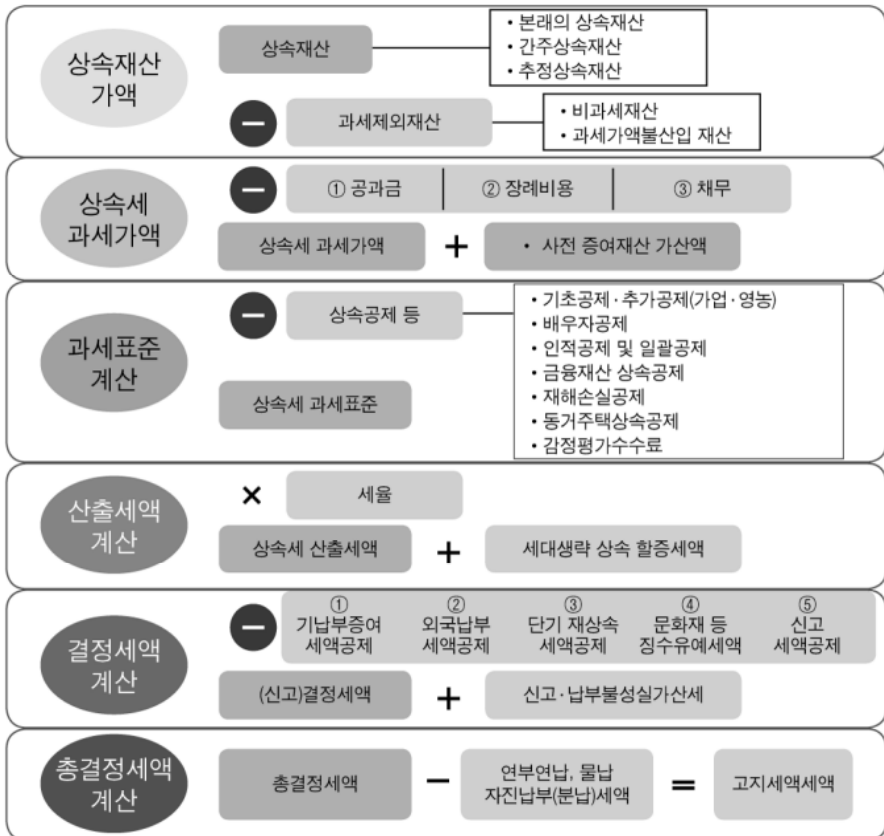
- 상속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상속세는 사망을 과세 시기로 삼아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함
- 상속세는 과세 상속 재산의 평가 후 세액의 책정, 납세 대상자의 납세 및 물납, 사후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침
- 상속세는 정부 부과 방식이지만 납세자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를 기초로 과세표준가 세액을 결정하므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하며, 납부 기간 내에 신고 시 상속세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신고서상에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그림 2-2]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운영 구조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는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와 연계되어 과세 금액의 산정은 증여재산의 가액과 재산가액 및 과세 가액을 세무부처에서 산출하며, 납세자는 공제 사항 및 전산상 산입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증빙을 하여 총 결정 세액을 계산하게 됨

[그림 2-3] 상속세 과세 세부 체계(기획재정부, 2019, 조세개요,166쪽)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 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상 상속, 증여 재산의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속재산으로의 검증 과정을 상속 개시일 혹은 증여일 6개월 전까지의 거래 기록을 검토하며, 그 외의 경우 평가심의 위원회를 거쳐 납세의무자의 재산 가액을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함(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그 밖의 유형 재산의 평가는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예상 가액을 의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및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함
-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책정한 가액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세액 결정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이 물납된다면 문화재 및 미술품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가액 내에 해당 물납 대상 물품의 가액을 납세대상자가 제출하게 되며, 제출 가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액 및 산출 세액이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결정 세액이 계산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하여 가액의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 분야별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가액을 책정할 수 있음
-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가액을 별도 산정하며 전문가 산정 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이처럼 서화 및 골동품의 상속 및 증여 재산 가액의 책정이 전문가 감정과 국세청에서 구성한 감정평가 심의회의 감정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 체계와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감정의 차이가 있음을 국세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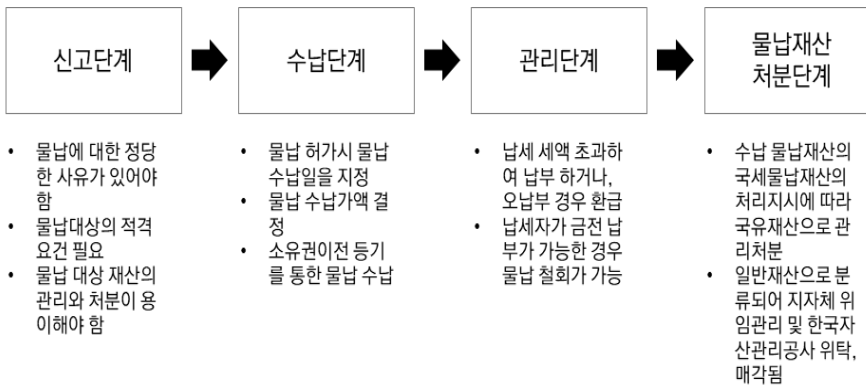
다. 일반 물납제도의 검토

- 상속세 납부 가액이 산정되고 나면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세금의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임
- 물납제도는 조세납부에 있어 일시적으로 조세 채무가 발생한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세채무를 금전에 의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물납제도는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 징수권의 확보를 모두 취하기 위한 제도임
-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금전 이외의 재화로 세금을 내는 물납의 경우도 가능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물납의 취지를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줌과 동시에 세수입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다(2006헌바49).”고 밝힌 바 있음
- 물납의 경우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물납을 허용하였으나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가 폐지되었음
- 물납의 경우 상속세만 가능하며, 증여세의 경우 2015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물납 대상 세목에서 제외되는 등 물납제도는 지속적으로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었으며, 물납의 제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음
- 일부 환금성이 좋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환금성이 용이한 자산의 경우 자산 책정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전략적으로 물납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금전 납부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납부가 가능함
- 물납제도는 물납의 신고단계, 수납단계, 관리단계, 물납 재산의 처분단계로 단계가 나뉨
- 신고단계는 물납 재산을 신고하는 단계로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서 성립되며, 물납

은 정당한 사유와, 물납 대상의 적격 요건이 필요함

- 이미 세액의 측정 단계에서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규모가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물납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액의 산정 및 검토는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음
 - 물납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연장할 경우에는 물납 허가기한 이내에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림 2-4] 주노종 외(2012) 현행 조세징수 수단인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



- 수납단계는 물납을 소관 세무처장이 허가할 경우 수납일을 지정하고 수납 가액을 결정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수납을 시행함
 - 물납의 허가 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 발송하여야 함
- 관리 단계는 납세 세액에 관한 정산 단계로, 과오납 혹은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 하거나, 물납 신청자의 금전 납부가 가능한 경우 납부 철회가 가능함
- 물납 재산의 처분 단계는 물납이 이루어진 후 국세 물납 재산의 처리 지시에 따라 국유 재산으로 관리 처분하는 단계이며, 기획재정부는 일반재산부로 물납 대상을 귀속시키고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매각하거나 국가

귀속하는 등의 물납 대상의 후 처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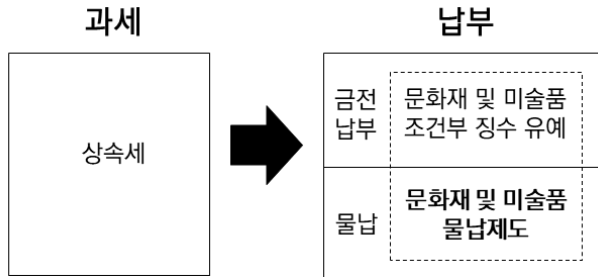
라. 기존 상속세 납세 상의 문화재 및 미술품에 관한 예외 조항

- 기존 물납제도는 세금의 납부가 국가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안정적이며 매각을 통한 현금화의 용이성이 중요함.
- 미술품은 가치변동성이 클 뿐 아니라 현금성이 떨어지는 특성에 의하여 물납이 어려웠음
-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금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재산으로 물납하는 조시 납부의 한 방법으로 납세 의무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조세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는 방식임
- 기존의 물납제도는 현금 전환이 용이하지 않는 물납 대상은 물납에서 제외하였으며, 물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장주식의 경우 현금으로 납부자가 전환 후 금전 납부가 용이하다고 보아 물납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적으로 물납제도는 소극적으로 운영되었음
- 상속세 물납의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1/2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 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납충당순위는 국채 및 공채, 상장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비상장유가증권, 상속인 거주 주택과 부수 토지 순이며, 상속 재산 가운데 문화재 자료와 박물관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징수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징수의 유예는 문화재 보호법 상의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에 한함¹⁾)

1) 유예의 기준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 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세 징수 유예는 국가가 보유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장, 보호,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소장자가 소장을 유지하도록 증세를 유예하는 제도이므로 소장자 개인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보호와 관리를 유도하여 왔음

[그림 2-5] 상속세 납부 방식 및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관계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

가. 납세에서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허용 기조의 전환

- 개정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상의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 국가가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문화재를 국가가 보유하는 쪽으로 기조가 전환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소극적으로 물납을 허용한 범위를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확대하고, 납세를 통해 국고의 확보가 목적이 아닌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물납된 물품은 매각하지 않고 국가에서 국민의 향유를 위하여 관리 및 활용하는 제도임
- 그러므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납세의 의무를 지닌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물납을 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재산에 대한 은닉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문화 향유권을 위하여 해당 문화재나 미술품을 전시 및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2010년 법제화되었음

나. 납세 요건을 통한 허용기준 명시

-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 재산에 문화재나 미술품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물납 신청의 요건으로 볼 때 상속세를 물납으로 하는 자는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자, 즉 고액 자산을 상속 및 증여로 받은 경우 해당 자산 가운데 문화재 및 미술품을 보유한 상속인의 자산으로 제한하여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의 소유자의 자산 규모 수준이 높은 경우로 물납을 제한함을 알 수 있음

다.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의 납세 단계화

-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물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의 대상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에 관한 평가를 통해 물납 대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 후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물납의 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 부처가 최종 권한을 보유하지만, 물납의 필요성의 검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납의 심사 여부 후 물납 여부의 검토가 아닌 국가에서 물납 대상의 필요 여부가 물납의 여부를 결정함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물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
- 물납이 결정된 이후에는 물납 대상은 국세청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통해 물납 사후 조치가 이루어진 후 국가 귀속이 되며 귀속된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소관 관리함
- 기획재정부는 동법 제 2장 5조에 근거하여 공공성을 요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적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항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의 심의를 관장하여야 하므로, 물납 필요의 인정과 관련한 체계의 마련과 세부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라.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심의의 의무화

- 개정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세법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물납의 심의에 있어 구(舊)법이 세무부처 내에서 소정의 물납 심의 및 결과가 도출되는 것과는 달리 물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를 통보하고 물납 물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함
- 신(新)물납제도는 물납 납세의 과정에서 납세 물품의 평가를 분리함으로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의 측면에 있어 재산적 가치보다 문화예술적 가치의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음
- 심의 결과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치를 강제할 수 없으며, 세무부처는 물납 심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을 보유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및 미술품의 예외적 가치의 평가를 공식화하고 물납의 허가 여부의 판단에 세무부처의 기준이 아닌 문화부처의 기준에 따라 의무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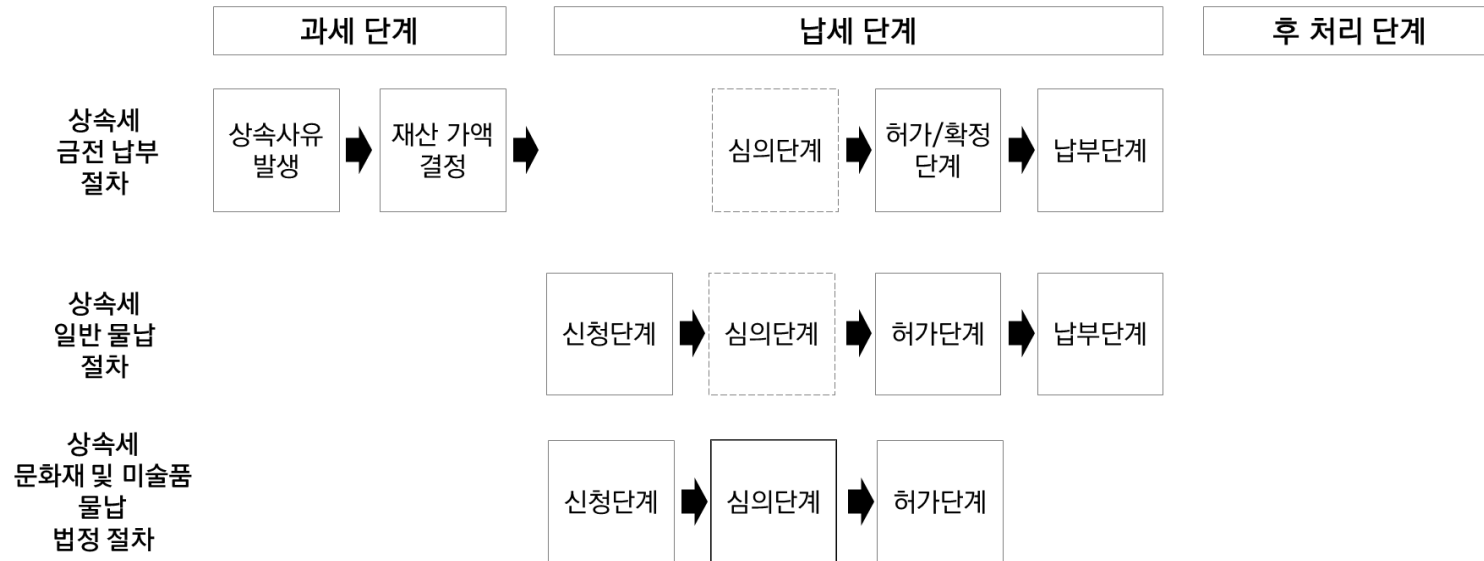
마. 그 외 사항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법적 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속 재산의 신고 단계에서 기산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검토 사항은 물납의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법제상으로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은 물납의 신청-심의-허가의 절차에 국한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포함하지 않음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취지가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통한 국가 소유의

의미보다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자산이 국민의 직접적인 문화 향유로 이어지는 것에 기반함

- 따라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물납 재산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할 문화 기반 시설에의 배치 문제가 함께 고려 및 포함되어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의 최종 허용 권한은 소관 세무청장에게 있으며, 물납의 문화예술적 가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토할 수 있으나, 문화재 및 미술품의 활용 가치 및 국유 재산으로의 정책 등 심의 사항은 물납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물납 절차 종료 후 상속세 납세 사후 조치 단계로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추진하게 됨

[그림 2-6] 상속세 및 물납 체계에 따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절차(연구자 정리)



제2절 물납제도 심의 운영 체계

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체계상 운영 주체

가. 세무관청

1) 물납 심의 단계에 필요한 신청 서류의 수합 및 검토

- 기존의 물납제도는 소관 세무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세액의 신청, 검토,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무관청에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상속 재산가액 및 물납의 신청 단계에서 물납 재산에 관한 현황과 주요 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심의에 필요한 사전 검토 사항의 논의가 필요함

2) 물납 심의에 관한 협조

- 소관 세무서장은 물납 심의가 들어올 경우 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물납의 심의 요청 단계에서 물납 대상에 관한 관계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물납 재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물납 심의에 필요한 물납 재산의 협조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청에서 물납 신청자에게 협조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 물납 신청 대상을 세무관청에서 보관, 관리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음

3) 물납 심의 기간 중 대상 문화재 및 미술품에 관리

- 소관 세무서장은 물납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납 허가 여부를 물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물납 신청 물품이 물납 신청 당시의 상태와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1) 물납 대상의 가치 검토에 관한 심의 체계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문화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고 물납의 허가 여부에 필요한 물납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 대상에 관한 심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 기한이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한 내에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구성하여야 함

2) 물납 대상의 가치 검토에 관한 심의 기준 마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심의는 물납 대상의 적정가를 물납으로 수용하는 기존의 물납제도와는 달리 문화재 및 미술품이 국민의 문화 향유의 질에 직접적 기여할 수 있을 뛰어난 대상이어야 함
- 이에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이 이루어질 경우 물납 신청서상의 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 외에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
- 더불어 문화재 및 미술품이 물납될 경우 물납 이후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3) 물납 심의에 유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적 논의 추진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심의에서는 국세청에서 전달한 신청 물납 재산의 책정 가치 세액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심의에서는 물납 신청 재산이 문화재 정책에 합당한지의 검토를 위하여 문화재청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심의 과정에서 물납의 대상에 관한 논의는 해당 문화재 및 미술품의 활용이 선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물납 평가에서는 활용 가치가 선제적으로 협력 논의되어야 함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 심의 단계에서 물납 심의에 필요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 논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다. 기획재정부

1) 물납 신청 재산의 활용 심의에 관한 협력

- 기획재정부는 물납 재산의 귀속, 관리, 활용을 담당하는 부처이므로 물납의 절차 이후의 과정을 소관하고 있으나,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자체는 물납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물납의 절차상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함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수립

- 기획재정부는 물납의 허가가 이루어진 이후 실제 문화재 및 미술품이 물납 재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소관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배치를 검토하여야 함

라. 문화재청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문화재와 관련한 보존, 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와 관련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며,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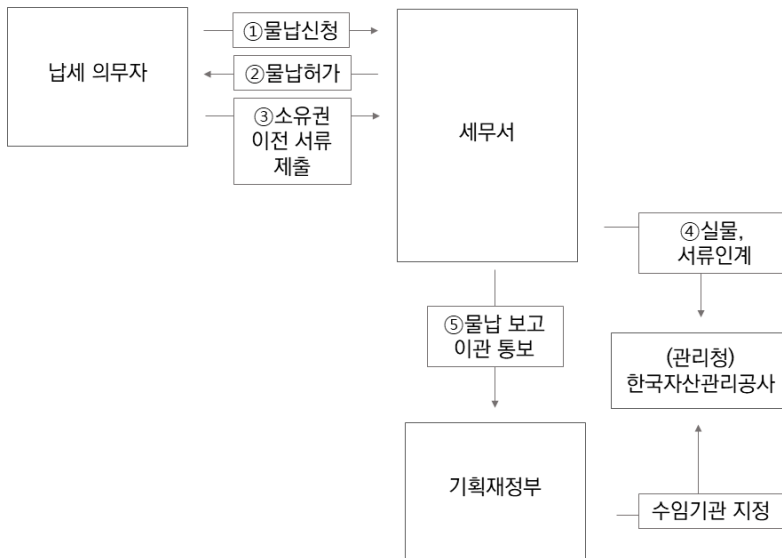
협조하여야 함

- 문화재의 경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촬영 행위 등 물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 또는 소유 관리인의 변경사항, 보관 장소의 변경 등 물납의 절차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은 원활한 문화재의 물납을 위하여 관련 절차와 절차를 소관하는 부처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소통 협력하여야 함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절차에 대한 운영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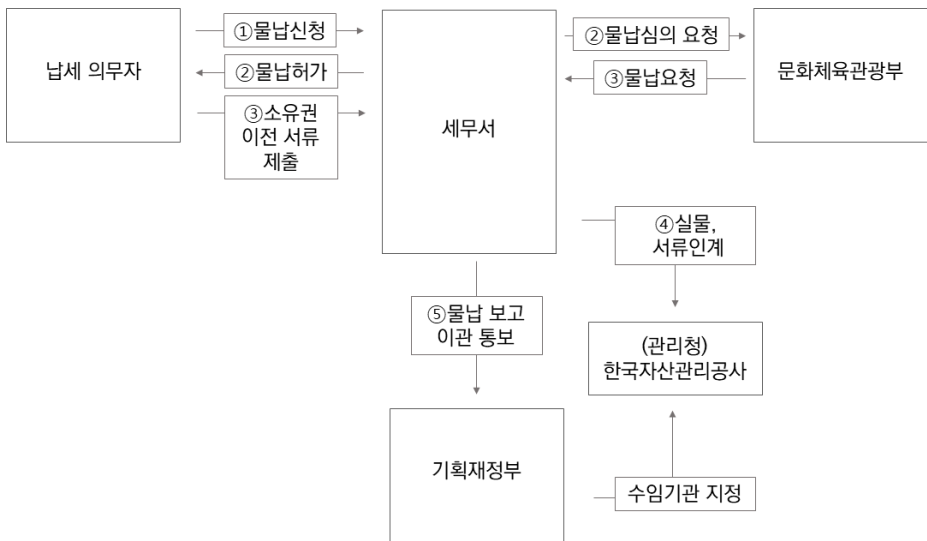
- 물납 소관 개별 주체별 업무를 추진 후 업무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물납제도는 구성되어 있음
- 물납제도는 납세 방식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운영은 세무서에서 소관 후 물납 후처리 과정에서 지방청,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청 등을 아우름

[그림 2-7] 국세 물납 체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3절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 국세 물납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 국세징수사 무처리규정 제3절에 근거하여 운영됨
- 그러나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물납 과세 및 물납의 허가 사항을 세무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체계가 아니며, 국세의 금전 납부 가치와는 별도로 문화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의 검토 및 물납의 활용 가치를 바탕으로 물납의 허가가 이루어져야함

[그림 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기반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운영 체계



3.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필요 여부에 관한 심의 평가 체계

가. 심의 평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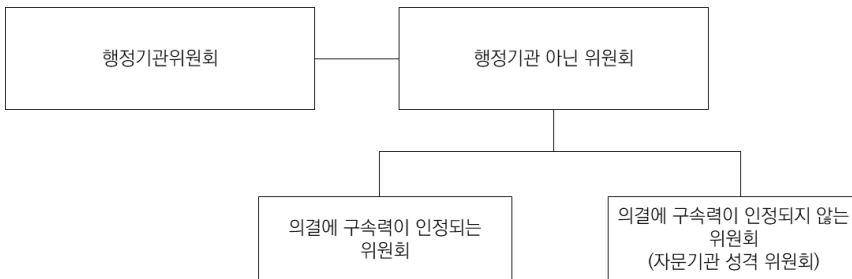
1) 위원회 제도

- 제도의 추진 체계 상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평가 심의를 토대로 물납 허용 여부가 결정함에 따라 평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 위원회는 물납의 심의와 같은 의사 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하고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 혹은 기관이 아닌 조직을 의미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310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함
-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면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함

[그림 2-9]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근거한 위원회의 구분



-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됨
-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유사하나,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점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구별됨
-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관계행정청이 그 의결 내용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와 구별됨
- 심의 추진 체계로의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관련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혹은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심의,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

〈표 2-1〉 위원회 유형 : 자문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연구(2018))

구분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정부조직법 제5조의 2에 근거 유사 사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 (정부조직법상 부속기관 중 자문기관에 해당) • 행정권한을 행정기관 명의로 행사
설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업무 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세부유형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크게 의결위원회(기속)와 심의 위원회(불기속)으로 구분하며, 심의·의결 위원회도 있음 *예: 의결위(최저임금위원회 등), 심의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위원회(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
사무기구	설치 불가, 단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는 설치 가능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 가운데 관계 행정청의 의결 기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그 결정이 바로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이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굳이 법률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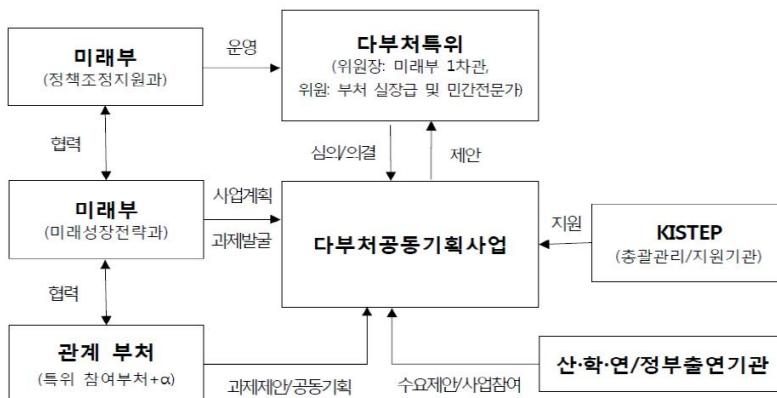
2) 물납제도의 부처 간 협력 기반 위원회

- 기존의 물납제도는 소관 세무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세액의 신청, 검토, 납부 등의 과정을 일괄 수행 후, 물납에 따른 국가 귀속 물납 대상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관리공단(캠코)에 위임함
- 기존 물납의 검토 시 가치의 책정 방식과 물납 대상이 구체적임에 따라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소관 부처는 소관 업무 사항에 관한 절차를 수행 후 업무를 이관하는 형태로 운영함
- 특히 물납의 국가 귀속 후 물납 대상의 처분이 공매를 통한 매각에 따라 금전 회수가 원칙으로 별도의 물납 대상에 대한 활용이 고려되지 않음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납세와 관련한 소관 세무관청과, 문화재 및 미술품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 문화유산으로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화

체육관광부, 매각이 아닌 국민의 문화 향유의 질 향상을 위한 물납 대상의 활용을 고려하여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상호 고려되어야 함

- 점차 증가하는 다부처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과학기술부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이 연구 차원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두고 부처 간의 협력제도 및 사업에 관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기능하는 부처를 선정하고, 해당 부처에서 부처 간 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및 제도에 대한 관리 미흡 및 진행사항에 관한 관리와 대응 방안의 마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김은정(2016)은 이와 관련하여 다부처 사업은 통합기획하더라도 개별부처별로 각각 진행하여 체계적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 부처 대표 실무를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정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하며, 제도 및 사업의 협의를 하여야 함을 지적함
 - 또한 다부처 사업은 전 단계에 관한 심의, 조정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의 확대, 신설, 혹은 지정이 필요함을 지적함(김은정, 2016)
- 이는 물납제도에 대한 다부처 간의 협력 차원에서 공동의 협의 체계가 필요하며, 해당 체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부처별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단계의 수행이 아닌 물납 전단계에 대한 통합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그림 2-10]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협력 운영 체계(출처 : 김은정(2016))



〈표 2-2〉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의 내용

과기부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시행 2022.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5호, 2021. 11. 17., 일부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정부 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내부적 운영 지침에 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처 장관”)이 지정하여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신규 다부처공동사업의 발굴·시행 등을 위해 수요조사, 공동기획연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기획사업을 거쳐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이하, “참여부처”),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주관부처”),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협력부처”) 사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동지침 제2조)
 - 과기처장관은 추진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과기처장관은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를 선정하며, 주관부처는 응용·개발연구단계의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특화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을 협력부처와 협조하여 조사할 수 있음
 - 과기처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 연구를 추진하며, 참여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제19조).

-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 작성 시 반영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연구성과의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실적을 점검함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서도 대상자선정, 업무분담, 협약체결 등 기본적인 역할을 과기처장관이 주도한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관련 심의를 주도하는 부서를 내부 운영 지침에서 정해야 하며, 미술품 등의 선정, 가치 평가에 있어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함

나. 상속세제 상의 가치 평가 체계

1) 국세청 평가심의 위원회

- 자진신고인 경우 납세자가 추정하는 재산의 가격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탈루, 재산가액의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 세무서장은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 상속 재산의 평가 후 세액의 책정, 납세 대상자의 납세

및 물납, 사후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침

- 상속세 및 증여세 상 상속, 증여 재산 가운데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도는 경매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액의 인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업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평가, 부동산의 평가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 국세청은 각각 평가심의회를 두어 세액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게 함
- 평가는 재산 가액의 평가 및 인정과 시가 불인정 감정 기관의 지정 등을 평가함
-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평가심의 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 3인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업 인수합병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9인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국세청의 평가심의 위원회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2인, 국세청과 동일 요건의 민간 위원 3인, 국세청의 공무원 위원 1인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인 등으로 구성됨
- 평가심의 위원회의 평가 대상으로 토지 등의 부동산,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 등이 포함됨
- 평가심의 위원회는 상속세 가액의 산정에 관한 심의 체계로 작동함

2) 상속세 재산 가액 평가를 위한 미술품 감정평가 제도

- 서화·골동품 등의 미술품은 별도의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감정을 별도로 진행함
- 미술품의 감정은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법에서 규정한 구분 항목에 따라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책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술품의 감정평가는 재산가액의 책정을 위한 목적이므로 책정 가액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가 납세자에게 유리함
- 이로 인하여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에 준하므로, 별도의 감정평가 심의회를 중복 운영함
- 상속세 상의 미술품 심의 평가는 위원이 국세청장의 임의 지정에 의해 선정되며, 선정 위원의 공표 또는 심의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음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사와 인가된 감정법인이 수행할 수 있음
- 즉 미술품 감정은 자격증을 보유한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가액이 산정되나, 미술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평가 포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상속세 책정을 위한 미술품의 감정평가의 기준에 대한 논의의 여부나, 관련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심의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미술품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소유자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증빙의 사항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움
- 물납 심의 단계에서는 물납 신청자의 신청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술 감정 전문인력 2인 또는 감정평가 심의회에서 책정한 가격을 기반으로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가격에 대하여 물납의 수용이 합당한지의 판단을 목표하여야 함
- 물납의 심의는 물납의 목적에 따라 미술품의 활용 가치에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적 가치에 관한 사항은 기책정된 미술품 가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물납 대상의 총체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정도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술품 평가에 관한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 가. 서화·전적
 - 나. 도자기·토기·철물
 -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 라. 선사유물
 - 마. 석공예
 - 바. 기타 골동품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역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체계 연구

제3장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
주요 고려 사항

제1절 주요 쟁점

1. 물납 대상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범위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의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 대상으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물납을 허용 요청하는 의사를 도출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의 시행을 위한 가장 큰 쟁점은 물납 대상으로서의 문화재 및 미술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하고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임. 예상할 수 있는 쟁점 중 하나는 심의의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납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물납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화재와 미술품의 판단기준이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임
 - 이는 한국의 법, 제도적, 인식적 관점에서 문화재와 미술품을 분리한다는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의되는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등이 포함됨
 - 법적 정의에 포함되는 문화재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가 아니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등록문화재’로 분류됨. 그 외 미지정 되었으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 문화재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까지를 문화재로 보고 있음
 - 미술품은 문화재와 달리 별도의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 관리규정」에서는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판화, 뉴

미디어 및 설치, 사진 등을 미술품으로 보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규정」에서는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미술품으로 범위함

-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적 분리 또한 유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자료와 미술관 자료가 분리 정의되어있는 것 또한 이런 이유로 이해될 수 있음
 -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박물관 자료’로 정의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인 ‘미술관 자료’로 명기하고 있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문화재와 미술품은 법적 정의나 제도적 정의로서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으며, 정책적 전담부서 또한 문화재는 문화재청, 미술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인식적/법제도적 분리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 또한 지속되고 있음.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 자료에 전통미술품들의 포함 여부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의 문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확한 연도나 시기 분류 기준 적용의 모호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신규 도입을 고려하는 물납제의 경우, 현 시점에서의 제도적/인식적 특성에 따른 제도 운영구조 및 범위 설정을 우선하고, 향후 문화재와 미술품의 기술적 분리에 대한 기존 법/제도의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 제도 운영방식의 개편 및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물납제의 경우, 기존 「문화재보호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명기하고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범위에 따라 제도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만, 문화재 및 미술품의 분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지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소장품의 분류기준으로서 적용하는 시기별 분류나 소장품의 내용적 분류 등을 참고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세부 범위 설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허가의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 신청 문화재 등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검토 후 필요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함
- 그러나 실질적으로 납세제도이며, 금전가치는 문화재 및 미술품 가치의 합당함을 책정하여야 함
-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은 제도 취지가 물납 문화재 등이 직접적인 국민의 문화 향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활용 가치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이에, 다음과 같은 물납 허가의 가치 검토 기준을 도출 할 수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세액에 합당한 가격 가치
 - 물납 대상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 물납 이후 활용방안 및 계획에 따른 가치
- 즉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격이 세액 가치와 비슷하게 책정될 경우의 기존 물납제도 외는 달라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향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가치에 대한 물납 허가의 기준은 모호한 사항임
 - 특히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와, 활용 가치가 상충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공식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함. 예를 들면 유명 작가의 작품 가운데에서도 주요 작품이 아니어서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나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오래된 문화재이지만 개체수가 많고 기존에 박물관, 미술관이 다량 유사한 작품을 보유하고 있어 소장 및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이는 문화재와 미술품의 범위나, 박물관 자료, 미술관 자료의 범위가 달리 적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치 평가를 하는 주체와, 물납 대상을 활용하는 주체가 가치를 달리 이해할 수도 있음
- 물납 허가의 기준은 물납 신청 요건에 부합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을 물납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납 허가가 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지속적으로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차원에서 물납의 허가에 관한 기준은 납세 및 국유 재산 가치에 관한 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 관련 총괄청인 문화재청 등이 함께 물납 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물납의 허가 여부는 부처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허가에 관한 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에 필요한 직접적 활용의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이에 물납의 가치 평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격 가치 평가의 감정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대상의 가격 산정은 물납 신청 당시 물납 재산 가액을 사전 기입하여 제출하며,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의 검토 단계에서 제출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 검토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물납의 심의 단계에서 검토할 것인지, 물납의 심의 이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검토할 것인지, 혹은 물납 허가 이후 물납의 수리 과정에서 조율 책정할 것인지의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에 따르면 가치의 책정 및 평가는 민간의 감정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재산 및 이들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

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의 사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의 체계를 자격화하여 감정평가사들이 합리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그러나 문화재 및 미술품에 관한 영역은 일반적인 감정평가사 등이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과는 달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경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감정에 대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인정하는 형태로 운영됨
 - 법에 근거한 감정평가사 가운데 미술품 감정에 특화된 감정평가 법무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경우 2021년 기준 1명에 그쳐 「감정평가법」에 근거한 객관적인 미술품 감정평가는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에 감정평가법과는 별도로 필요에 의하여 화랑협회에서 설립한 한국 미술품 감정위원회(감정위원 30여명), 한국고미술협회에서 개설한 미술품 감정위원회(활동위원 50명), 2003년 개설된 한국미술품 감정협회(30여명) 등과, 서울옥션, K옥션 등 민간 미술품 경매회사의 자체 감정위원회 등이 미술품 감정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격 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방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감정 전문가가 한정되어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음
 - 무엇보다 화랑 협회나, 경매 회사 등 미술 시장의 주체가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감정 단체는 전문성과는 별개로 시장에 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격가치 산정을 위하여 민간의 감정 기반을 활용할 필요는 있되, 민간의 감정 체계와 물납제도 상의 가격 가치평가가 중복, 또는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물납제도는 미술품의 감정평가에 관한 공적 평가로 작용 하게 되며 미술 시장에 해당 미술품의 가치를 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
- 이에 영리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객관적이면서도 물납의 본래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평가가 가능한 심의 주체의 구성이 필요함

제2절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가. 사례 분석의 개요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도출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국내 문화재 및 미술품을 제도에 기반하여 심의하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조사 분석함
- 국내 사례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격 심의 및 가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심의 제도를 기반으로, 별도의 심의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함
- 사례 분석은 제도 운영 담당자의 현장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에 대한 의견 및 쟁점을 도출함

〈표 3-1〉 사례 분석 기관 및 심의

기관명	심의 제도명	심의 체계 명
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심의 제도)	문화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이응노미술관	박물관/미술관 수증심의제도	박물관/미술관 수증심의 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
국립중앙과학관	국가과학유산심의제도	국가과학유산심의 위원회

나. 문화재 관련 심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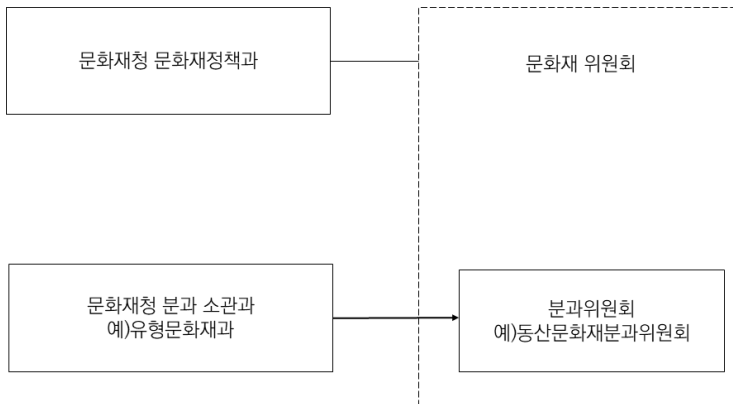
1) 문화재 관련 심의 제도 개요

- 문화재 관련 심의 제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영됨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보호물 또는 보호구정 지정과 해제, 현상변경, 국외반출, 역사문화환경의 보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등이 포함됨

2) 소관 부처

- 문화재 기본계획, 국회보고,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한국문화재단 등의 설치 등 문화재 관련 정책 및 관리는 문화재청이 소관함
- 문화재와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규정함
-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분과별로 유관 부서 내에 조사 및 운영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
- 문화재정책과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추천, 공개, 수당지급 등의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함

[그림 3-1]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회 소관 부서



3) 문화재 심의 체계 구성

-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문화재위원회는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임기 2년(연임 가능)의 100인 이하를 문화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됨
- 문화재 위원회는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추대함
- 문화재 위원회는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 분과위원회 등 총 9개의 분과 위원회로 구성됨

[그림 3-2] 문화재위원회 조직 및 위원 구성(문화재청 웹사이트)



- 문화재위원회는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외부 전문위원으로 적합한 자문을 해줄 위원 인력 풀에 해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위원이 부재할 시에는 외부 자문이 가능함
-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 혹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분과위원회에 출석 및 발언이 가능함

3)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

- 문화재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 혹은 문화재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유관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함
 -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로운 일로 인식
- 문화재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차례 연임이 가능함

4) 문화재위원회 심의 방식

-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분과별로 이루어지며 안전이 여러 분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함께 심의하는 경우도 있음
- 분과별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를 기준으로 개최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 개최 및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유관자들의 조사 및 발표가 선행된 후 위원들이 심의를 진행함
- 회의 및 의결은 1회로 끝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문화재청 혹은 유관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심의를 위한 기초 조사는 문화재청 내 기초 조사원이 사전 조사를 선행 후 연구 설명 자료를 사전에 작성하여 자료집 형태로 문화재위원회에 제공하며, 그 내용에는 평가, 가격, 기초 연구 등이 포함됨

5) 문화재 위원회 정책 운영

-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정책위원회가 없어 자발적으로 합동 분과장회의를 진행함
- 개별 문화재 분과의 위원장은 분과별 운영 사항을 공유 및 개선하는 논의를 진행하며, 문화재 심의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함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 수집에 관한 위원회 제도

1) 제도 근거 및 개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8조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가치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으며 수증심의를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증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임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금전, 부동산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증 받고자 할 경우 수증여부를 결정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자료를 확충하고 설립·운영을 지원함을 목적함
- 소장품의 기증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인 만큼 물납 심의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2) 소관 부처

- 수증심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내부 규정에 관련 조항 및 운영 방법을 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증심의의 체계는 개별 박물관·미술관에 따라 달리 운영됨

3) 수증 심의 체계 설치 근거

- 문화재 관련 심의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여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6조에 따라 수증심의 위원회가 설치 및 규정됨

4) 수증 심의 체계 구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증심의 위원회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됨.

5) 수증 심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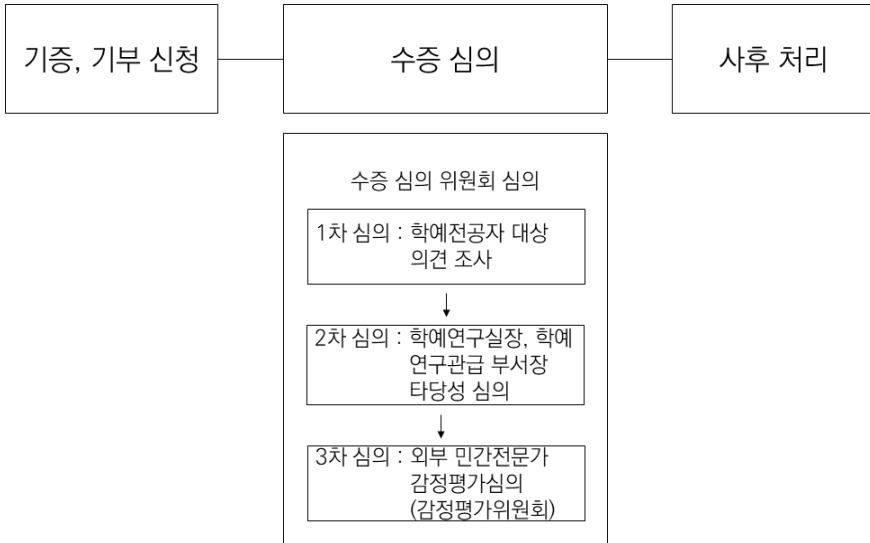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따라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수증심의회가 수증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 유물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음

6)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증 심의 체계 운영 구조

-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부 규정에 의하여 수증위원회를 3단계로 구성하고 심사 운영함
- 1차 수증위원회는 관내 전공자의 의견 조사로 구입 여부에 관한 의견만을 조사함
- 2차 심의는 학예연구실장(당연직)과 학예연구관 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장 5인 이상이 의결하여 박물관의 정책상 타당한지만을 논의하며, 만장일치제로 운영함
- 3차 심의는 전현직 문화재전문위원과 학계 및 전문 인력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로 심의하며, 가격 심의를 진행함

[그림 3-3] 국립중앙박물관 수증심의 운영 체계



7) 정책 관리 체계

-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증위원회 정책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위원회의 준비 및 운영의 업무, 개선 사항에 대한 발굴은 박물관이 직접 관리함
- 수증위원회 시에 심의의 필요에 따라 심의 장소가 심의 대상 문화재 혹은 미술품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장시설을 활용하여 추진함
- 심의는 개별 건에 따라 진행하며, 심의 위원의 전문성과 갈등,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함

8) 물납제도에 관한 의견 및 쟁점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심의에는 문화재 및 미술품을 직접 보고 심의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보관 수장고와, 열람 가능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심의에 따라 문화재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심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외부 환경에서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검토가 필요함
-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수증 심의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따라서 각 심의는 단계화가 되어 있으며 단계별 심의 참석한 사람들은 중복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이를 통해 문화재 심의가 특정 심의 여건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타당한 수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을 하게 함
- 각 단계는 심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심의 범위 외의 논의로 확장하지 않도록 명확히 심의 단계의 역할을 확정함
- 물납제도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물납 심의처럼 가격, 가치, 활용이 상호 고려된다면 단계적 심의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함
- 소장품으로 활용되는 심의는 단순히 문화재의 가치 심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어느 정도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이 이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수증 신청이 들어온 대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소장한 유물과 유사 혹은 중복되거나, 혹은 박물관, 미술관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수증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움

다. 정부미술품 심의 제도

1) 정부미술품 심의 제도의 개요

- 정부미술품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가운데 정부미술품으로 등록하여 전문적인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한 등록 심의 제도임
- 정부미술품의 등록은 정부미술은행이 정부미술품의 선정 심사·취득·대부·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3항과, 「정부미술품운영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19호) 제7조에 근거함

2) 소관부처

- 정부미술은행의 운영은 국립현대미술관 내의 부서 형태로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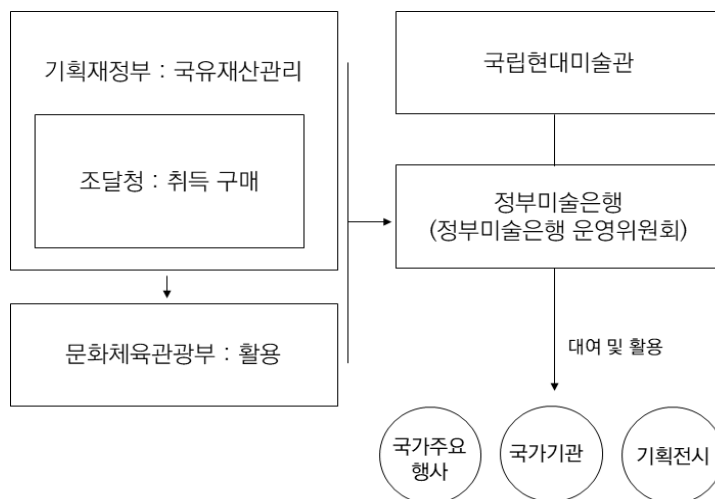
3) 위원회 설치 근거

- 「정부미술품운영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19호)제3조에 근거하여 정부미술품운영위원회가 정부미술품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규정」(국립현대미술관 제210호)제2장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미술품의 가치 심사, 가격 평가, 구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정부미술은행 심의 체계 구성

-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은행의 제도와 운영 방안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등 정부미술품의 심의 및 정책과 관련한 유관 부처가 다수인 심의 제도의 특성상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미술은행에서 운영하되 유관 부처의 협력을 요함

[그림 3-4] 정부미술은행 심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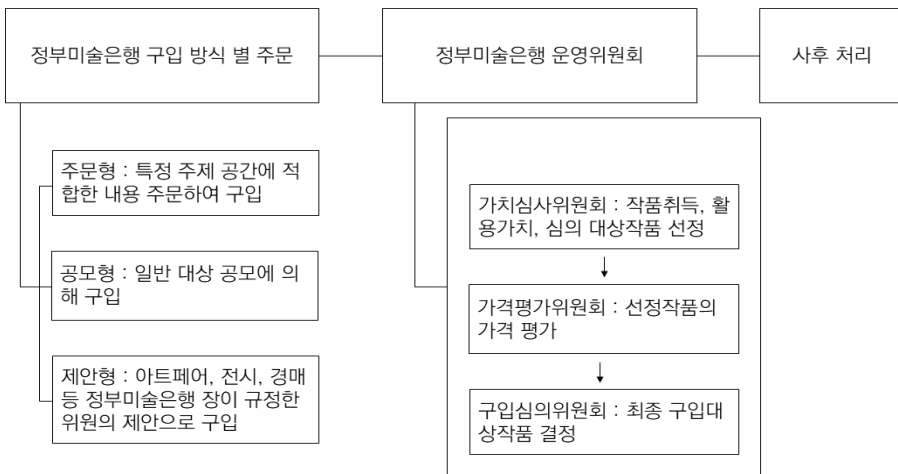


- 정부미술은행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6명의 공직자 당연직과, 민간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함
- 당연직 위원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및 활용에 관련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부처를 대표하는 형태로, 국회사무처 관리국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해당함
- 민간위원은 미술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외에는 세부 규정을 두지 않음
-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의 선정 심사, 취득심사 등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5) 심의 방식

-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최종 결정함
- 심사위원회의 경우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함
- 구입 가격은 가격 평가위원회의 위원 합의에 의해 결정함

[그림 3-5] 정부미술은행 심의 방식



- 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는 가치심사위원회, 가격 평가위원회, 구입심의 위원회로 나뉘며, 각 위원은 동시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음
- 각 심사위원회는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됨

6) 정부미술은행 운영 구조

- 정부미술은행의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심사·취득·대부·관리 및 효율적 활용 등에 관한 심의에 따른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함
-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맡으며, 정부미술은행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정부미술은행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부서의 장이 맡음

7) 물납제도에 관한 의견 및 쟁점

- 정부미술은행의 심의 대상은 문화재, 미술품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미술품에 해당함
- 미술품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심의의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함
- 기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문화재청 등의 심의 위원을 기준으로 해당 물납 신청 물품에 대해 가장 심층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누구인지를 토대로 심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봄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나 미술품이기 때문에 물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활용할 기반 시설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문화재 또는 미술품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봄
-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수증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부미술은행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의의 기준과 방향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
- 단순히 국가가 보유할 만한 문화재 및 미술품이 아니라 활용 및 배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물납 심의 참여를 통해 물납 대상에 대한 국민의 향유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봄

라. 과학기술자료 심의 제도

1) 과학기술자료 심의 제도의 개요

- 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소장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료의 기증 및 구입에 관한 심의회임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 규정」(국립중앙과학관규칙) 제9조에 근거함

2) 소관부처

-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운영정책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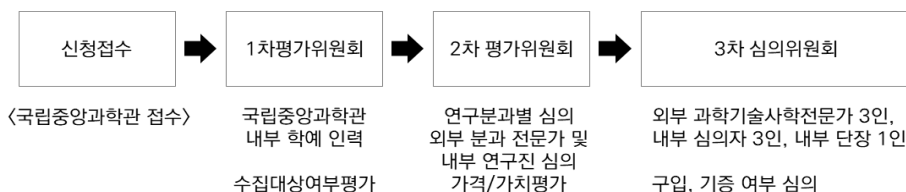
3) 위원회 설치 근거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 규정」(국립중앙과학관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자료의 구입시 구입 평가와 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

4)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심의 체계 구성

- 과학기술자료 심의회는 박물관, 미술관 수증심의 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를 두고 있음
- 1차 평가위원회, 2차 평가위원회, 3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구성됨

[그림 3-6] 과학기술자료 심의 체계



5) 심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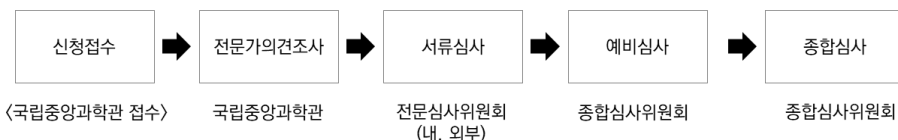
- 1차 평가위원회는 내부 학예 인력들을 기반으로 1차 수집에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는 단계임

- 2차 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원의 위촉을 포함하되, 외부 위원은 심의 대상에 관련한 연구사과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격 평가 및 가치심사를 실시함
 - 가격 평가는 특정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임
 - 가치 평가는 상, 중, 하로 평가하며 평가 위원 중에 1인이상 ‘하’로 평가되는 대상은 심의에서 탈락함
- 3차 운영심의회는 외부 위촉 위원 3인, 내부 3인, 내부 위임 단장 1인, 총 7인으로 구성되며, 구입과 기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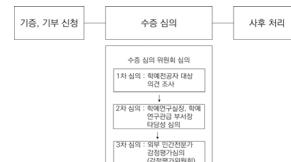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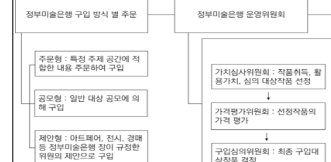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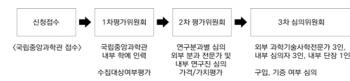
6) 관련 제도: 과학기술자료 등록제

- 과학기술자료 가운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이는 국가가 중요한 과학기술자료를 민간의 신청을 받아 등록, 관리하여 의미있는 국가 중요과학기술자료를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12년 처음 제도를 도입 제안시에는 인증제도로 시도하였으나 2019년 등록제로 최종 결정됨
- 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자료 등록을 권유하기도 하고, 혹은 신청을 받기도 함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내에서도 별도의 등록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접수-전문가의견-서류심사-예비심사-종합심사로 구성, 심의하여 최종 선정함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의 경우 신청자는 국가가 해당 자료를 꾸준히 실태조사를 하고, 보존상태의 등급을 나누어 보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도 함

[그림 3-7]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운영 절차



〈표 3-2〉 국내 문화재 등 심의 제도 비교

구분	문화재심의제도	박물관미술관 수증심의제도	정부미술품 심의제도	과학기술자료 심의제도
심의 관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부처 단독 소관 문화재청 내 문화재 심의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기관 단독 소관 개별 박물관, 미술관 내 수증심의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부처 소관 정부미술은행 관리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내 정부미술은행 관리 운영 조달청, 기획재정부, 국회 등 유관부처의 심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기관 단독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내 소장용 과학기술자료 심의제도 운영
심의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분과별 문화재 위원회 운영 위원회가 총괄 심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내부 심의회 구성 2차 내부 심의회 구성 3차 내부외부 심의회 구성 3차 총괄 심의회가 최종 심의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가치 심사위원회 2차 가격 평가위원회 3차 정부미술은행운영심의위원회 3차 정부미술은행운영심의회의가 최종 의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내부 평가위원회 2차 내외부 평가위원회 3차 과학기술자료 심의 위원회 3차 과학기술자료 심의 위원회가 최종 심의 의결함
심의회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심의 안전 기반 월 1회 심의회 개최(정례화) 공모 후 심의위원의 임명 200여명의 전문위원 별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물관, 미술관 관장이 심의위원 임명 필요에 따라 기증유물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로 보완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이 추천하고 정부미술은행장이 최종 위촉 당연직 위원은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 6인이며, 위촉직 민간 위원 선정 및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회는 내부인력 또는 내부부서의 추천 민간 전문가 구성 심의회는 내부위원, 내부 단장 외, 민간위원을 위촉 운영
심의 체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심의 대상 및 안전이 다양함 심의를 위한 문화재청 내 분과별 조직 체계 및 인력 구성이 확보 선행됨 문화재관련 종사자들에게 문화재 위원으로의 위촉은 권위와 명예를 인증하는 것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물관, 미술관에 필요한 소장품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내부 현황 및 필요 현황은 내부 인력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내부 인력의 심의를 중점 검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미술품 심의 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책 논의 또한 정부미술은행운영심의회에서 함께 협의, 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물관, 미술관과 유사한 체계이나, 과학기술자료 자체의 인종 및 발전적 논의를 위하여 국가 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를 별도로 운영 심의함

2. 국외 물납제도

가. 국외 미술품 물납제도 개요

- 해외에서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를 선행적으로 운영해 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물납제도를 검토하고자 함
- 국외 물납제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다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주로 물납의 제도적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쟁점에서 도출된 물납의 도입 취지와 방향성, 물납의 운영 체계, 물납 심의 주체, 물납 가치 평가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와의 여건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음
- 또한 물납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물납 활성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도출하여

나. 국가별 물납제도의 도입 취지 및 방향성

1) 영국

- 영국은 1896년 세계 최초로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도(Acceptance in Lieu)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음
-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표하며, 전국민이 다양한 문화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기본권 등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미술품 등 문화재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
- 19세기 후반 많은 귀족과 부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Death Duty, Estate Duty)와 증여세(Capital transfer tax)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부동산과 문화재, 그리고 미술품 등의 문화자산이 국내외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1896년 재정법(Finance Act)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와 예술 작품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한 것에서 유래함
- 영국 상속세법 제 230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상속세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인정함
- 상속세법 제 230조에 따르면 물납의 대상은 예술 작품, 건물, 토지, 책, 미술품,

원고, 과학 발명품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문화재 중에서 국가적,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를 물납이 허용되는 자산으로 제시함

2) 프랑스

- 국민에 대한 문화 서비스가 근대국가의 의무로 생각하는 프랑스의 문화적 인식을 기반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화예술의 자원과 지원을 전담하고 있음
- 1968년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에 대한 물납을 허용함
 - 2022년 10월 4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술품 물납의 대상에 대한 구매, 수증,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양도세 등 세금이 면제되는 대신, 양도, 승계에 대한 기록 행위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상속 과정에서 미술품이 분산되거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운용
- 납세자에게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보다 문화재 보존을 통한 문화기본권, 문화 향유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함을 강조
- 2009년 물납제도 도입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당시 문화부장관 크리스탱 알바넬(Christine Albanel)은 ‘물납제도 덕분에 1만점 이상의 미술품, 책, 문화재들이 국가 소장품이 되었으며, 미술품의 양적 질적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하며 물납제도를 통해 물납된 미술품은 문화적 성과로 인식함

3) 일본

-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상속세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하며, 금전 납세와 상응하거나 혹은 물납 자체에 대한 유의미함을 사회 전체에서 인정하기 보다는 물납의 허용에 대한 소극적 허용을 통해 보수적으로 물납을 이해 및 허용함
- 제도 도입 시기인 2000년 일본 국회 문교위원회에 발언한 엔도 아키오(遠藤 明雄)는 국보, 중요 문화재가 주요 대상이며, 보편적 가치를 넘은 미술 작품에만 국한하며, 「문화재보호법」과 같은 운용으로 대응함을 명시하며, 금전 납부 우선 원칙인 일본의 납세제도에서 미술품은 특례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함

- 일본 국세통직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법 제38조1항에서 상속세액이 10만엔을 초과하고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내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며, 상속세법 제 41조 1항에서 이러한 연납으로도 납부하기 어려운 자에 한해서 물납을 허용함
- 물납을 할 경우에도 물납 총당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미술품은 물납 총당 순위에서 3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납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실상 물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3〉 일본 미술품 물납 우선 총당순위

우선순위	물납가능 재산의 종류
1순위	국채, 지방채, 부동산, 선박, 부동산 중 후순위 재산, 등록 미술품으로 인정받은 미술품
2순위	주식 등 유가증권, 주식 중 후순위 재산
3순위	동산

- 다만, 문화청에 등록 미술품을 신청하여 등록이 수리되는 경우, 특례제도를 통하여 물납 1순위가 됨
- 등록 미술품은 ‘미술품의 미술관에서의 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의해 국가가 주요 미술품으로 등록 관리하는 미술품을 의미함
- 등록 기준은 중요 문화재, 국보 지정 미술품, 세계 문화의 견지상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특별하게 뛰어난 가치를 갖는 미술품으로, 회화, 조각, 공예품, 문학자료, 고고자료, 역사자료, 복합자료로 구분함
 - 2020년 세제 개정을 통해 등록 미술품의 범위에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포함함
- 등록은 문화재 소유권자가 사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닌 상속자는 물납을 위한 미술품의 등록이 불가능함
- 따라서 물납의 허용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물납을 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등록 미술품의 심사 절차를 통과하고, 국가가 물납 대상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제공 동의 하였을 경우로, 물납 신청의 의사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아닌 상속인의 의사에 기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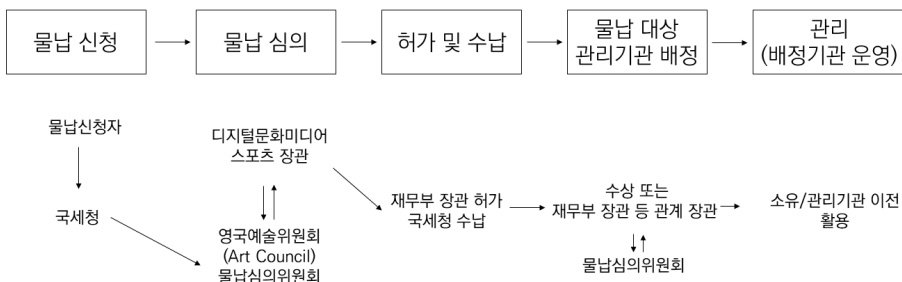
- 따라서 일본은 물납제도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뛰어난 미술품을 지닌 소유자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위하여 미술품을 등록하고, 계약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의 사유 미술품을 공개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허용한 상속인이 사망할 시 국가의 지속적 문화재 및 미술품의 활용을 위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제도임

다. 국가별 물납제도의 운영 체계

1) 영국

- 영국의 경우 물납 신청, 물납 심의, 물납 허가 및 수납의 단계를 한국과 유사한 주체와 방식으로 운영하되, 물납 대상의 관리와 활용 역시 물납의 단계 내에 포함하고 있음
- 물납 신청자는 물납을 희망할 경우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물납 심의에 필요한 서류와, 심의 신청서를 제출함
- 국세청은 문화미디어체육부 산하 영국예술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물납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 물납 심의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장관에게 자문을 구하며, 승인 여부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장관에게 제출함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물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
- 물납이 승인되면 납세자는 국가에 재산을 납부함

[그림 3-7] 영국 미술품 물납체계 운영도



- 물납된 물품은 수상 또는 관계 장관이 물납 재산의 공공 향유 및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등의 공공기관에 유물을 관리하도록 배정하며, 혹은 물납 신청자가 물납 신청 당시 특정 기관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음
- 별도의 요건이 없을 경우 예술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물납 재산을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배정하며, 물납 대상의 심사는 물납 심의회에서 진행함
- 관리 기관이 정해지면 물납 재산은 해당 기관으로 이전되며,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전시 등에 활용됨

2) 프랑스

- 프랑스는 물납 심의에 문화부가 일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둘 뿐 물납 심의의 전 단계를 세무부처에서 담당하고, 결정함
- 부처 간 국가 문화재 보존심의 위원회((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d'agrément pou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가 물납 심의의 체계로 지정됨
- 물납 신청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6개월, 국외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물납을 신청하며, 납세자의 세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
- 물납의 재산은 시장 가치로 평가하여 제출함
- 예산국장은 물납 신청서를 부처 간 국가 문화재 보존심의 위원회((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d'agrément pou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에 심사를 의뢰함
- 위원회는 신청 재산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와 가격에 대해 학예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 결과를 제출
- 재정부 장관은 위원회와 문화부장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에게 물납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

재산의 가액이 납부 세금보다 클 경우 박물관이 차액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함

- 물납 재산이 국가 귀속이 되어 국유재산이 되는 과정을 거치나,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함
- 물납 재산은 문화부장관이 물납 작품을 관리할 곳을 결정할 권한을 지님
- 국립 기관 외 지방의 공립 기관에도 배정하고 있으며,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과학관 등의 소장품이 되어 공공 소장품으로 전시 등에 활용함
- 프랑스 문화부는 물납 물품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공개함

3) 일본

- 일본의 미술품 물납제도는 프랑스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관리함
- 일본의 미술품 물납제도에서 문화부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해 문화부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연계 제도를 통해 기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문화재는 물납 대상으로 3순위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물납이 어려움에 따라 등록 문화재의 물납 신청 시 가격 평가만 진행함

〈표 3-4〉 일본 등록 미술품 제도

(등록 미술품 제도)

- 미술품의 미술관에 대한 공개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8년 6월 10일 법률 제9호)에 근거하여 운영
- 등록 미술품은 박물관 미술관법 (1951년 법률 제 285호) 제2조1항에 근거하는 박물관, 미술관 사실이 미술품의 공개 및 보관을 수행하여야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미술품 소유자가 임의의 박물관, 미술관을 지정하여 등록 미술품을 공개할 것을 약속하는 공개 계약을 선행하여야 함
 -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유효할 것
 - 당사자의 해약의 신청이 불가능한 점
 - 공개는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계약은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 미술품의 등록은「문화재보호법」(1950년 법률 제214호) 제2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그 외 세계 문화의 관점에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특히 뛰어난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함
- 문화청장관은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등록 미술품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속, 합병, 분할 등 미술품의 승계가 있을 경우 상속인, 합병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은 소유자의 지위권의 승계함과 동시에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등록 미술품 소유자가 미술품 등록의 허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해당 등록 미술품에 대해 미술관 등과의 등록 미술품 공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미술관에 해당 미술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됨
- 공개계약이 종료된 이후 공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됨
- 등록 미술품은 상속시 물납을 할 수 있으나, 물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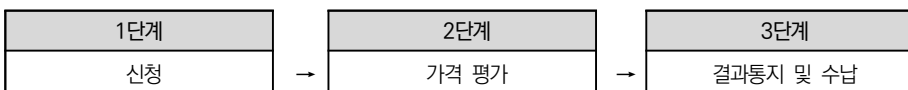
- 공개계약은 상속이 발생하거나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은 승계인에게 자동 계약 승계됨

대상자(대상기관)	내용
소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과의 협의 • 미술품 등록신청
문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의견 청취 • 미술품 등록여부 결정 • 소장자에 등록여부 통지
소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과 공개계약 체결 • 등록 미술품을 미술관에 인도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청에 등록 미술품 공개 계획 신고 • 등록 미술품 일반 공개, 보관 • 문화청에 등록 미술품 공개 현황 보고
문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미술품 소재 정보 제공

등록 미술품제도 업무 흐름(위에서 아래로)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및 제45조제 1항, 4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의 물납의 특례상 당해 물납에 미술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은 미술품의 미술관 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1997년 법률 제99호) 제2호의 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 미술품을 납세 의무자는 물납 신청할 수 있음
- 여기서 등록 미술품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자산 가운데 등록한 미술품이 아닌, 상속 개시 전에 상속자가 사망하기 전 등록한 미술품의 경우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여타의 규정과 관계없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 물납의 대상에 대한 가격 평가만 물납제도에서 심의로 고려되며 시장가격을 납세자가 제출할 경우 이를 가격 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함
- 시가의 산정은 화랑이나 경매회사에서 가격 감정을 실시함
- 국가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처리함

[그림 3-8] 등록 미술품의 물납 순서



라. 물납 심의 주체의 선정

1) 영국

- 영국은 물납 심의의 주체를 공개 채용 및 공시하며,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에 관한 사항 역시 대중에게 공개하여 물납 심의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소구함
- 영국 예술위원회가 의장과 심의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신청 유물의 탁월성, 가치 평가, 관리기관 배정에 대해 자문함
- 위원은 전직 박물관장, 대학교수, 큐레이터, 갤러리 등 아트딜러, 경매회사 대표, 고택의 소유자 등이 포함됨
- 위원회는 물납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물납 물품을 공시함
- 물납 심의 위원회의 물납위원의 공개 및 위원장의 지속성있는 위임을 통해 물납 심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함
- 물납위원의 미술 관련 이력 공개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하며, 물납위원의 공백이 생길 경우 공개 채용을 통해 임용하는 형태로 운영함
- 물납심의에 관한 연례 보고서 발간을 통한 심의의 결과를 공표하고 의견의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위원의 책임을 부여함
- 물납 심의 위원회가 물납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어느 정도 전담하는 구조적 특징은 물납의 세부적 요건과 기준을 딱딱하게 두기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개별 물납 대상에 대한 유연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임

2)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물납 심의위원의 수가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은 문화부장관이 2명, 재정부장관이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구성함
- 부처 간 국가문화재보존심의 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부처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프랑스의 물납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1986년부터 신경생물학자이자 미술컬렉터

인 장 피에르 샹고(Jean-Pierre Changeux)가 맡고 있음

- 물납 심의 위원에 관한 사항은 프랑스의 경우 영국처럼 위원을 공개 채용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는 별도로 하지 않음

3) 일본

- 일본의 등록 미술품에 관한 심의는 심의가 아닌 회의의 형태로 구성되며, 문화청에서 운영하는 법정 심의회는 아님
- 등록 미술품조사연구협력자회의위원으로 불리며, 각각 회화와 조각 위원회, 공예품 위원회, 서예분과, 그 외 협력자로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미술과장, 모리미술관 관장, 도쿄예술대학 비상근이사, 다이토 구립 도서 박물관 주임연구원, 도쿄도 현대미술관 참사, 도쿄예술대학 교수,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학장 등의 학술 및 박물관, 미술관 관련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 총 14인으로 구성됨
- 등록 미술품에 관한 심의 위원은 문화청 웹사이트에 상시 공개되어 있음
- 등록 미술품인 경우 물납 대상의 가격 가치 심의는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하고자 할 때, 문화청에서 국민이 누리는 미술품의 공개 가치를 염두에 두고 가격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 세법상 미술품의 평가는 재산 평가 기본 통달 133조에 의거하여 시가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작할 수 있게 하되, 전문가 감정을 유도함
- 물납 미술품의 가격 평가는 3개의 다른 회사에 감정을 의뢰하여 가격을 인정하나, 비교적 저가의 미술품은 유사 거래 사례가 있어 평가 가능으로 인정될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책정을 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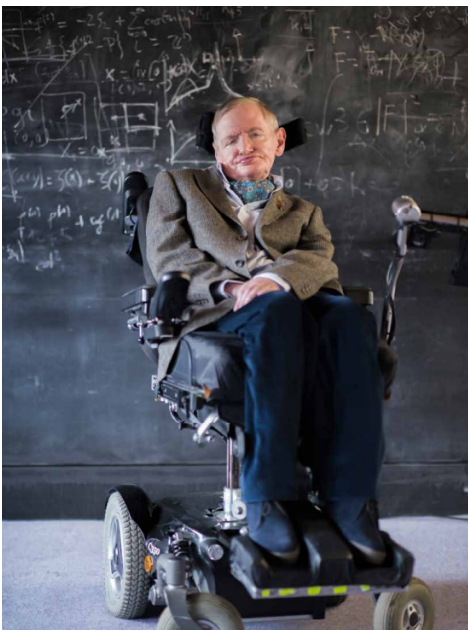
마. 국가별 미술품 가치 평가의 보완책

1) 영국

- 영국은 심의 주체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물납 미술품의 평가 신뢰도를 보완하고 있음

- 위원회는 물납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물납 물품의 가격과 문화적 가치를 공시함
- 영국 예술위원회는 1년간 물납된 자산을 수합하여 연례 보고서의 형태로 성과를 발간하며, 물납된 문화재 및 미술품 등에 대한 개괄적 정보 및 작품 이미지와 함께, 심의위원의 선정기준과 이를 관리 배치한 박물관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 게재하여 미술품 물납제도에 관한 성과를 공개함

[그림 3-8] 2021 AIL 물납 연간 보고서 부분



13.



The archive and office of Professor Stephen Hawking

The archive of the late Professor Stephen Hawking CBE FRS FRSA (1942-2018), including manuscripts, typescripts and proofs for scientific papers and research, books and lecture notes, correspondence, recordings, and awards and the contents of his office from the Department of Applied Mathematics and Theoretical Physics (DMATP)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ncluding his library, prizes, fixtures and fittings, and his wheelchair.

Stephen Hawking, known for his many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oretical physics and cosmology, was also a beloved public figure and celebrity. The material included in this offer reflects the two sides to his impact: the rigorous academic work, manuscripts of his scientific breakthroughs, and his teaching resources, alongside artefacts of his public life, such as scripts for appearances on *The Simpsons*, and a record of a version of *Galaxy Song* by Monty Python to which Hawking lent his voice as part of the comedy troupe's 2014 reunion concert tour.

Hawking's story as a scientific prodigy who fought against motor neurone disease was immortalised in the Oscar-winning film of 2014 *The Theory of Everything*, though he had been famous for many years before its release. His 1988 popular science book *A Brief History of Time* became one of the best-selling works of non-fiction ever published. Hawking was awarded practically every international medal for physics, particularly for his work on black holes and general relativity. Having attended both Oxford and Cambridge, he had a longstanding connection with the latter, serving as its Lucasian Professor of Mathematics for 30 years.

The Panel considered the archive and office, accepted from the Estate of Stephen Hawking, to be pre-eminent under the first and third criteria, in acceptable condition and, following negotiation, fairly valued.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 the archive has been permanently allocated to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 attached to its offer. The office has been permanently allocated to the Science Museum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 attached to its offer.

Left: Professor Stephen Hawking 2015. Photo: Anne Tetterton. <https://www.annetetterton.com>

Above: Professor Stephen Hawking's office from the Department of Applied Mathematics and Theoretical Physics (DMATP), University of Cambridge. Photo: Courtesy of Christie's

- 이는 금전 납부의 세액 가치의 평가 기준과 비교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적 가치의 제시를 통해 금전 납부가 필요한 재산가액에 대한 가격 가치와의 비교가 아닌 미술품의 독보적인 가치 평가를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음

2) 프랑스

- 물납의 심의가 재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나, 그 명칭을 국가문화재 보존심의 위원회로 하는 등 문화 유산의 보호 목적이 납세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함

- 상속세 외에도 증여세, 재산세 등 가장 폭넓게 물납을 허용함
- 국민의 문화 기본권을 위한 방향성이 뚜렷하며, 물납제도가 문화 예술부문의 업무적 성과로 인식함
- 물납 재산에 대한 보유 기간 5년의 증빙을 하여야 하며 무상 소유권 확보 물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등 물납 대상 재산에 대한 일부 요건을 두고 있음
 - 물납 재산의 보유 기간 증빙 5년 조항에는 물납 물품의 법정 상황을 포함하여 이전 소유자의 정보 및 인수 방법 등, 소유권의 권원 확보에 대한 증빙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물납제도는 미술품에 포용적인 국가의 분위기를 토대로 물납제도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논쟁보다는 물납 심의에 통과한 뛰어난 미술품이 물납됨과 동시에 미술품의 가격 가치와 내용적 가치의 향상에 필요한 작품 이력 및 관련 정보의 확보를 통해 가치 평가의 공정성보다는 물납의 성과가 곧 미술품의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함
- 이를 통해 가치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세무부처에서 평가 절차를 주도하게 하여 납세 가치에 대한 세무부처의 평가에 관한 수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 1972년 장 오로네 프라고나르의 〈뫼니에의 초상(Portrait de Mr Meunier)〉(1769)가 최초의 물납 미술품으로, 해당 작품은 미술관의 예산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높은 평가를 받는 미술품이 공공컬렉션이 된 대표적인 사례임
- 1973년 파블로 피카소가 사망하면서 유족이 막대한 상속세 납부가 어려워지자 피카소의 유작 200여점을 물납하여 국가가 소장하여 현재는 피카소 미술관을 물납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대표적인 물납 성과를 홍보하고, 물납 작품이 직접적 향유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활용을 통해 물납제도의 국민 향유를 유도하여 국민이 미술품의 가치 평가 결과를 향유 혜택을 누리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에 관한 관대함을 유도함

3) 일본

- 일본은 금전 납부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 미술품 물납제도를 이해함에 따라 미술품의 가치 책정에 관한 객관성의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음
- 메이지대학교 교수 이케가미 켄은 미술품의 가치 책정이 유동성이 크며 객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물납제도가 운영됨에도 그에 대한 인정할 만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봄(이케가미 켄(池上 健), 2021)
- 일본은 등록 미술제도를 통해 해당 미술품이 금전 납세와는 비교도 안 될 뛰어난 미술품임을 사전 검증하는 과정과 절차를 두고, 국민이 기향유를 하여 향유 가치를 검증, 암묵적으로 해당 미술품의 사회적 가치를 합의하도록 하며 물납 신청 및 물납 심의 시 등록 미술품 가격 가치 평가에 향유 가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가치 평가의 산정 방식이나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에 대하여 향유 가치를 보완 가치로 마련하고 있음

〈표 3-5〉 국외 물납제도 비교 요약

구분	프랑스	영국	일본
관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예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국세청/문화청
물납 운영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납 신청시 재정경제부로 신청 부처 간 심의회 <국가문화재보존심의회>에서 물납 필요성 심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물납 허가 여부 결정 물납 결정 후 물납 배치 기관의 선정은 문화부 장관이 결정함 <p>국가문화재보존 심의회 심의 → 재정경제부 장관 물납 허가 → 문화부 장관 물납 배치기관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납 신청 시 국세청에 신청 심의는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심의회를 운영 구성하여 심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물납 수납 수상 또는 재무부장관이 심의회와 협의하여 물납 배치기관 선정 기관이 물납 미술품 활용 <p>세무관청 물납 신청 관리 → 영국 예술위원회 물납심의위원회 → 수상, 재무부 장관, 심의회 협의 물납배치기관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으로 물납 신청 및 등록 미술품 여부를 검토 아닌 경우는 사실상 물납이 어려움 등록 미술품의 경우 가격 가치는 문화청이 활용 가치를 염두하여 가격 평가심의회 구성 운영 국세청이 물납 결정 및 물납 배치는 등록 미술품 제도의 계약 기관으로 정함 <p>국세청 물납 신청 관리 → 등록미술품여부 검토 → 문화청 가격평가심의회 → 등록미술품 등록기관에 배치</p>
물납 심의 평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간 국가예술문화재보존 심의 위원회(5명*) 총리가 위원장 임명, 재정경제부가 미술 전문가 2명, 문화부 2명 임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세무부처에서 직접 소관하여 문화적 평가에 관한 외부 평가 외압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예술위원회 내에서 대물변제심의 위원회 운영 큐레이터·학자·미술품 시장 관계자 등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 위원 공개 및 심의 의견 보고서 발간을 통한 심의 위원들의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미술품 평가는 문화청에서 문화적 가치만을 심사 결정하며, 가격 가치는 배제 물납 신청시 가격 평가를 국세청에서 실시(문화청 협조 여부확인 불가) 등록 미술품제도를 통해 가치심사와 국민 향유가 검증된 미술품만 물납 심의
물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책, 수집품, 문서로 최소 5년 이상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지역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원고, 문화재, 역사적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미술품 국보 및 세계문화의 건지에서 역사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특히 뛰어난 가치를 갖는 미술품
심의 보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품의 5년간 소유 이력을 물납을 통해 투명화 물납 된 미술품의 문화 기반 시설 건립, 배치로 직접적 향유 가치 확대 (예: 피카소 미술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례 물납 성과 보고서 발간 및 심의 의견, 평가 의견, 미술품 가치 평가 사항 공시 물납 미술품 심의 위원들의 이력 및 전문성의 공개를 통한 전문가 인적 신뢰도 기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미술품 제도를 통한 사전 대국민 미술품 향유 및 박물관, 미술관 미술품 활용 향유 가치에 물납 세액 가치를 가산하여 책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품 소유이력의 투명화 유도 물납 미술품 기반 별도의 기반 시설 건립 사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품 물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명예로운 행위로 인식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는 등록 미술품제도로,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격 평가는 납세제도인 물납제도로 하여 가치의 분리 검증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체계 연구

제4장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운영 체계 제안

제1절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체제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 납세에 있어 국가가 예술적, 역사적으로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미술품을 보유하고, 국민들에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세액의 확보와는 달리 문화적 혜택의 가치를 높이하고자 하는 제도임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국가가 문화재 및 미술품을 물납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이 분명하여야 하며 미술품에 대한 향유 가치가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물납제도의 성공 여부는 뛰어난 미술품에 대한 물납 신청이 활성화되고, 물납 미술품이 직접적 국민의 향유로 이어져 물납제도가 납세의 편법을 위한 제도가 아닌 문화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함에 있음
- 공공성, 향유 중심, 미술품에 대한 신뢰성과 합목적성, 사회적 합의 도출을 기초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제도 운영 방향

가. 물납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보

- 물납제도의 성과는 물납 미술품을 향유하는 국민들이 뛰어난 미술품의 물납을 성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품 물납 신청자 또한 미술품 물납에 대해 납세 특례로 인식하지 않고 뛰어난 미술품의 물납이 지니는 의미적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은 뛰어난 미술품을 물납제도를 통해 국민의 향유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향유 가치 기준을 중심으로 물납의 성과를 매해 보고서로 발간함
- 프랑스의 경우 물납의 성과는 유명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여 물납 대상 미술품의 가치 자체를 소구하기도 하고, 혹은 피카소 미술관과 같은 물납 성과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구성하여 물납의 성과가 문화 기반 시설의 확충과 향유의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함
- 이러한 영국과 프랑스의 물납 성과에 대한 적극적 소구는 물납 대상 미술품에 대한 국민의 향유 뿐만 아니라 물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로 하여금 물납을 위한 미술품의 기준을 인식하게 하고, 뛰어난 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음
 - 영국의 경우 납세자를 밝혀 어떠한 취지에서 물납을 하게 되었는지, 물납 재산이 어떠한 국가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등을 보고서 등에 포함시킴
 - 프랑스의 경우 물납의 허용을 통해 미술품과 관련한 소유 이력 정보의 확보를 유도하고 미술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계 제도화 하여 궁극적으로 물납제도의 운영이 미술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물납제도가 예술적으로 뛰어난 미술품을 확보하는 제도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음

나. 공정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 심의 체계 마련

- 물납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 활성화는 물납제도에 대한 납세 가치의 평가가 납세자와 세금 혜택을 누리는 국민 양측 모두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됨
- 이는 물납 체계 상에서 이해관계를 배제하면서도 물납에 대한 가치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함
- 물납 심의는 물납 신청자들이 제시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액과, 문화재 및 미술품을 평가 심의 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

적여야 하는 단계이므로 물납 대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니는 전문 심의 평가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여기서의 전문가는 미술 시장과는 다른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와 함께 문화 향유에 대한 가치를 상호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물납 대상의 고유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와 관련한 정책 및 심의가 문화재청을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심의를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물납의 심의상 문화재와 관련한 심의를 문화재청의 협조를 바탕으로 심의를 추진할 수 있음
- 미술품의 경우 정부 귀속 미술품과 관련한 정책 및 심의가 정부미술은행을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정부미술은행에서는 정부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회와, 분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물납의 심의상 미술품과 관련한 심의는 정부 미술은행의 협조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 가치 평가의 경험과 전문 인력의 풀을 지닌 상기의 유사 공적 심의 체계의 연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다. 납세자의 자발적 우수 미술품 물납 유도 방안 모색 필요

- 뛰어난 미술품의 물납 성과를 위해서는 물납에 관하여 납세자가 상속 받은 미술품의 가치에 대해 사전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물납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뛰어난 미술품을 적극적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물납 절차에 대한 용이성과 혜택이 분명하게 주어져야 함
- 미술품은 출처가 명확하고 국가가 보유하기 합당한 이력과 취득이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선별하여야하나 물납 신청자가 상속을 받기 전까지 본인이 상속 받을 미술품에 관한 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는 어려움
- 물납 신청자는 한정된 시간 내에 상속 및 상속세의 납부가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해당 미술품 물납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할 경우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물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으로 미술품의 소유자는 미술품의 소유 후 상속을 위하여 미리 공공에게 미술품을 공유하는 행위를 선행함으로써 국가가 금전 세금 납부를 대신하여 미술품을 물납 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사전에 증명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라. 물납제도에 관한 부처별 협력 기반 강화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과정상으로는 물납의 신청을 세무관청이 물납 재산의 세액 가치를 검토하며, 물납의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물납의 대상 문화재 및 미술품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며, 물납의 귀속 및 사후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물납 재산의 활용과 유지·관리의 사항을 소관함
- 물납의 여부를 가르는 물납의 심의 단계에서는 단순히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문화적 가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의견과 검토 사항을 심의·검토하고, 협력적 논의를 통해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이는 각각 개별 부처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쪼개어 추진하는 것을 넘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한 협력적 방향 모색이 필요하며, 공동의 논의와 협의의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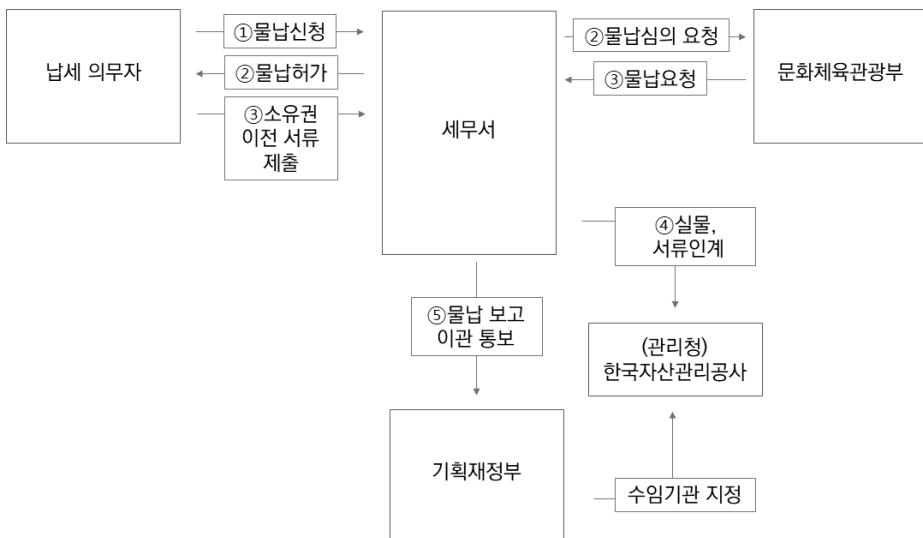
제2절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운영 체계 및 방안

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 운영 체계

가. 물납제도의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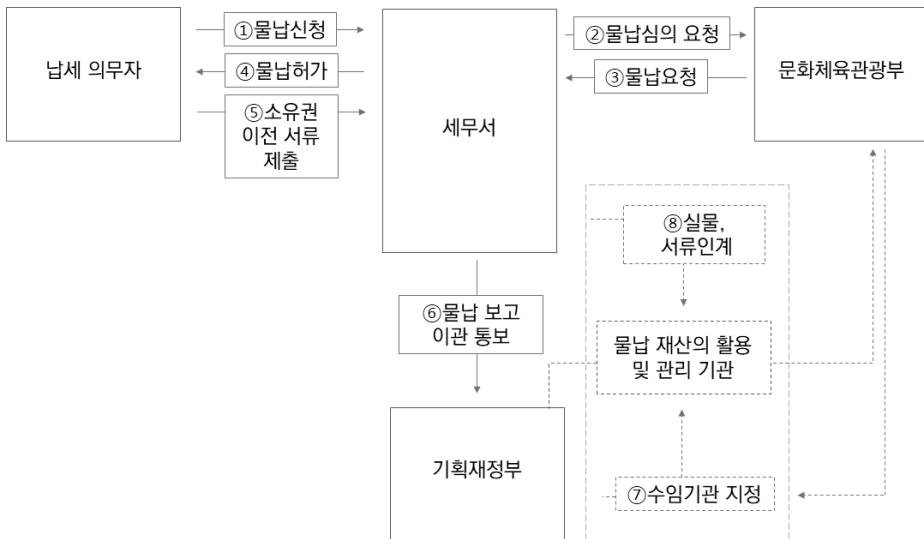
- 기존 물납 운영 체계는 납세 의무자가 물납 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물납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 및 이관을 통보하는 형식임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물납은 물납 신청된 문화재 및 미술품에 관하여 물납 심의를 세무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납 신청 대상을 심의하여 물납이 필요할 경우 물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그림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물납 체계도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심의에 관한 사항만을 검토 후 물납의 절차는 종료 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물납 미술품의 활용을 전제로 추진되는 제도로, 이전의 기획재정부가 물납이 이루어진 후 이관 통보 및 수입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물납 재산의 활용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
- 또한 기획재정부가 일임하던 수입 기관의 지정 사항은 문화재 및 미술품의 전문적 관리가 가장 적합한 기관의 배치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세무부처의 물납 심의에 관한 사항과 함께 물납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는 경우 그림 29의 형태로 물납의 체계를 재정리 할 수 있음

[그림 4-2] [그림 4-1]을 토대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체계에서의 물납 재산의 활용을 운영 체계에 포함하여 재정리한 물납체계 제안 안 (연구자 작성)



- 기존의 국세 물납 체계와 비교하여 볼 때,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운영 체계 상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물납 운영에 있어 여러 타 부처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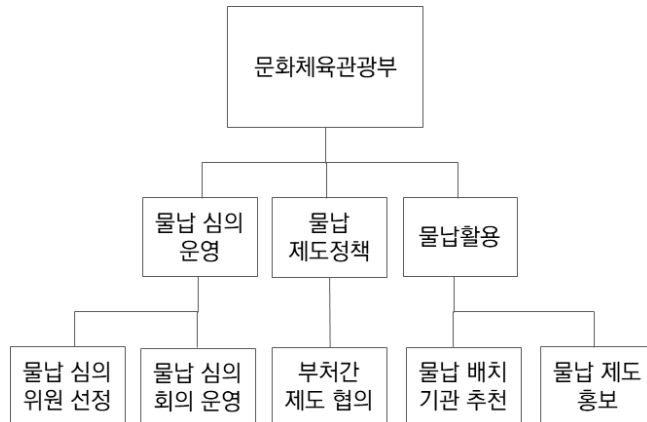
계 및 절차에 관여 및 소통하여야 하며 제도의 운영상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 이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추진되는 물납의 심의는 세무부처, 기획재정부 등 절차에 따라 분리, 전달되는 제도의 체계가 아닌 물납의 심의 단계에서 물납 재산의 활용이 사전 검토 및 통합 의견 수렴될 수 있음
- 따라서 세무부처보다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를 주도하고 물납의 문화적 효과 극대화를 주도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임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물납의 심의 운영, 물납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부처 간의 소통과 협의, 물납의 활용 방안과 효과 가시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함

[그림 4-3]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관련 업무 소관 사항 (연구자 작성)



- 이러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가장 핵심 사항은 물납의 심의로, 국세청의 물납 신청 관련 사항의 전달로 인하여 물납 대상 물품이 물납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함

- 물납 심의는 물납 대상에 대한 세액 평가 측면의 국세청의 입장과, 문화, 예술,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물납 이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통합 논의되어 물납 대상의 가격 가치, 예술적 가치, 활용 가치를 검증하게 됨
- 따라서 물납의 심의는 각 부처 차원에서 물납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이제 도입되는 시기로,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 현실에 맞게 제도적 수정과 개선 발전 방안을 지속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더불어 물납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현재 물납제도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물납의 활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적절한 물납 배치 기관의 추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부처로서 제안이 필요함
- 또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도입에 논란이 많았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또한 긍정적으로 마련되어야 물납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이 가능하므로 물납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성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절차에 대한 운영 추진 체계

가. 물납 심의 운영 위원회

1) 개요

- 물납 심의의 운영 위원회는 부처 간 심의·의결을 위한 협력 위원회 제도로 구성 운영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물납 심의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서 행정청의 의결 구속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구성함
 -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그 결정이 바로 국가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행정청이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데 물납 심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물납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처장이 물납 허가
여부 결정권을 보유하며 심의 의견에 대한 강제성을 보유하지는 않음

- 물납 심의 위원회는 관계 부처 간의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정책과 운영,
물납 허가 여부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한 목적으
로 구성하는 위원회임
- 그러므로 물납 심의 운영위원회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총괄 운영 및 조정
의 역할을 통해 부처별 수행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총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물납 심의는 여타의 물납제도와는 달리 가치 심의의
기준이 금전적 세액 가치, 예술적, 학술적, 역사적 가치, 활용 가치가 함께 검토되
어야 하므로 심의 단계에서 관계 부처 협의회 형태로 물납 허가 여부를 심의 의
결하고, 협력 추진체제로 작동하도록 함

2) 위원 구성

- 물납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물납 대상의 평가 가치 기준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검
토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이는 단순히 뛰어난 미술품을 평가, 선별하는 것과는 구분되며, 그러므로 위원회에
는 부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식견과 연륜이 풍부한 전
문가가 함께 검토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물납의 심의는 물납의 신청 시 성립되어 비정기적으로 들어올 신청 사항을 심의할
수 밖에 없으며 물납 대상의 유형 또한 신청자의 물납 신청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
간 위원의 임기는 고정하기 어려움
 - 물납 신청 대상 및 안건에 따라 위촉 시부터 해당 물납 대상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제척되며, 또는 물납
신청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야 함

나. 분과별 심사 위원회

- 물납 심의는 문화재 및 미술품과 구분 없이 물납 대상으로의 적합함을 검토하기 때문에 개별 물납 문화재 또는 미술품에 대한 자료의 조사, 내용적 검토와 의미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물납 심의에서 모두 추진할 수는 없음
- 그러므로 물납 심의 운영 위원회와는 별개로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물납 심의를 위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조사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문화재 및 미술품의 경우 심의 대상에 따라 전문성을 달리 필요로 하지만 특히 문화재와 미술품의 경우 기존의 유사 심의 체계에서도 알 수 있듯 각각 별도의 심의 체계가 있을 정도로 심의 방식과 검토 사항이 차이가 있음
- 이에 문화재 및 미술품 분과로 구분하여 해당 분과의 물납 대상에 관한 조사 및 심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미술품 분과 심사위원회는 물납 신청 미술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 심사할 수 있음
 - 물납 신청서상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 물납 대상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 물납 이후 활용 방안 및 계획 제안
- 분과별 심사위원회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이 있는 위원을 대상으로 하되, 심사 위원회의 위원이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세부 대상 및 항목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물납 대상의 가치 심의

- 납세에 있어 물납의 대상은 세액인 납세 가치보다 예술적 가치가 같거나 커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은 가치 금액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승하거나 시장의 요인에 의하여 변동하기도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은 창작에 기반하여 예술성을 인정받는 대상으로 문화재 및 미

품 역시 거래에 기반한 상업적 가치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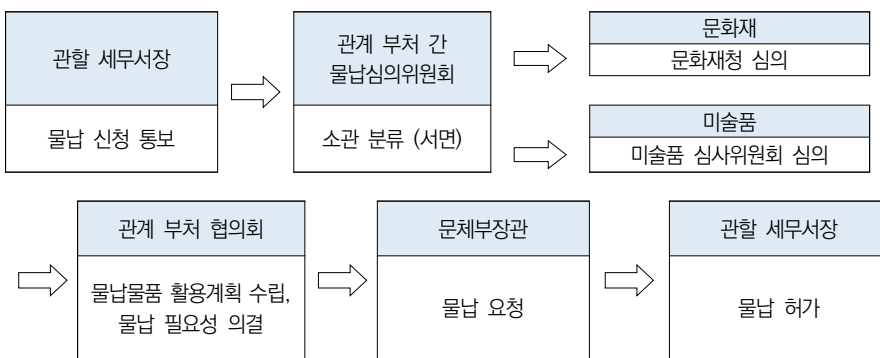
- 미술품은 미술 시장을 기반으로 가치가 책정되며, 미술품의 자체적 특성, 작가와 관계된 특성, 시장적 특성으로 구분됨
- 미술품의 자체적 특성에는 작품 재료, 제작 연대, 크기, 서명 등과 같은 객관적 요소와 예술성, 기법적 우수성, 장식성 등 주관적 요소가 포함
- 작가와 관계된 특성에는 작가 생존 여부, 연령, 성별, 국적, 거주지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전시 수상 경력, 전시회 개최 경력, 학력, 대중적 명성 등 직업적 성취 요소가 고려됨
- 시장적 특성으로는 작품 매매 시기, 화랑이나 경매와 같은 유통 경로, 작품 소장 기록, 매매처의 명성 등이 고려되며, 작품의 상태(condition), 희귀성(rarity), 진위(authenticity), 역사성(historical importance), 소장 기록(provenance), 유행(fashion), 주제(subject matter), 크기(size), 재료(medium), 질(quality)이라는 10가지 요소를 상업적 가치의 선정 기준으로 정의되기도 함(김성혜, 2020)
- 한여훈(2012)²⁾은 미술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작품의 재료나 방법에 따라 동일한 작가의 작품에도 가격 차이가 나는 등 작품의 가치 선정기준에 따라 항상 미술품의 가치가 동일하게 추측되기 어려움
- 미술 시장에서 주로 가치는 다양한 지수나 가치 평가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이 이루어지며, 책정된 가치는 한시적으로 책정되어 있음
- 따라서 물납 신청자가 신청하는 물납 대상의 가치는 개별적으로 상기의 가치 선정 기준에 따라 적정가가 책정되어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은 화상, 후원자, 수집가, 비평가, 큐레이터, 미술관, 경매회사와 같은 미술계 시장의 주체들을 통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방식에 따라 물납 물품의 가치가 책정 되어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가 가치 산정액과는 별도로 문화재와 미술품이 사회에 투

2) 한여훈(2012), 투자로서 미술품의 가치분석, 예술경영연구, 한국예술경영학회 제 22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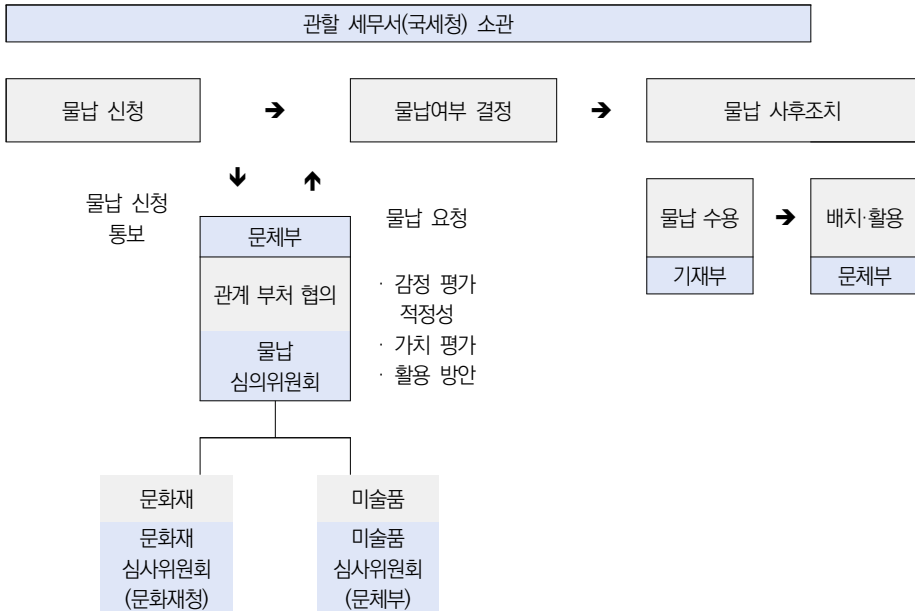
입되었을 때, 혹은 투자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영향은 개인부터 대인·공동체, 사회·경제적인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음(양혜원 외, 2019)

- 물납 물품의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공공재로서 도출될 수 있는 영향 가치가 더 크다면 물납 물품의 세액과 금전적 가치 교환과는 별도로 국가가 물납을 통해 얻는 이익 또한 증가됨을 고려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대상은 그 자체가 예술적·역사적 가치의 책정에 있어 해당 물납 대상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함

[그림 4-4] 물납제도 운영 흐름 안



[그림 4-5] 물납 운영 추진 체계 안



3. 기타 논의 사항

1) 물납 신청 사항

- 물납 신청자는 물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물납 신청서와 함께 물납 재산 관련 정보의 증빙 등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해당 서류를 물납 신청자에게 사전 접수하여야 함
- 물납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서류에는 물납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물납 신청 문화재 및 미술품에 관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감정에 따른 시가 책정의 자료, 소유권과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물납 신청이 발생한 경우, 물납 신청자의 신청과 함께 물납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통보하여야 함

- 영국의 경우 물납 신청 시 신청자는 작품 설명, 작품에 대한 수집 정보에 대한 요약 사항, 도록이나 달력 등의 작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작품 감정서, 작품 보존 상태 검사서, 작품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1식으로 된 제본 형태로 납본할 수 있도록 함

〈표 4-1〉 영국 물납 신청 시 자료 제출 사항

- 설명 : 소유자, 소유이력 및 활용이력, 유형, 시대적 범위, 관련 자료 보유의 여부, 작가 및 매체정보 등
- 요약서문 : 보유기간, 물품의 중요성 및 의미 설명, 자료의 생성 경위, 역사적 연구적 측면의 핵심 중요 사항, 완성도, 관련 기록의 여부, 예술적 중요성, 소장가의 컬렉션 기준 및 수집 관점에 관한 세부 사항
- 달력 및 도록 등 : 공공 기관에 기탁 시 출판물 등
- 평가 : 가격에 대한 평가 값과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 비교 대상 등
- 소장 확인사항 : 기탁 시 기탁 기관의 정보, 소장 및 보관 장소의 정보, 소장장소에서의 이동가능 여부 및 방법
- 이미지, 사진 : 양질의 컬러 사진 인쇄본 3부 혹은 디지털 파일을 담은 CD 제출
- 자료의 수합물

- 일본의 경우 물납 신청 이전에 미술품의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엄격하므로 등록 통지서,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박물관 미술관과의 계약 체결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물납은 가격 평가 신청서 등을 첨부 신청하는 것으로 간소화 함

〈표 4-2〉 일본 등록 미술품 제도 신청 시 자료 제출 사항

- 대상 작품 이름, 수량(건), 종류(부문), 규격, 중량, 재질, 제작시기, 부속물
- 미술품 제작자(미술 작가)의 성명 및 출생 연도
- 중요문화재의 지정 여부와 지정일 및 관련 번호
- 미술품이 제작 후 현재 소장자에 이르기까지의 소장 이력
- 미술품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미술품의 뛰어난 가치(계약 예정 미술관과 협력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
- 미술품의 권리 관계(소유권, 공유 관계, 관련 재산 등)
- 미술품의 현재 소재지, 현 소장자의 성명
- 계약 예정 미술품의 명칭과 담당자(설치자) 및 주소
- 미술품을 외부에 공개할 시 소장자의 성명 공개 여부(크레딧 라인)
- 미술품의 공개 이력(전시 출품 이력, 전시 미술관 및 전시 기간 등)
-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문헌, 연구 등

- 우리의 경우 물납 신청의 단계에서 일본과 같이 사전 검증 단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물납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영국과 유사하게 심의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빙을 요구해야 함
- 다만 이러한 서류의 준비가 일반 개인인 물납 신청자가 스스로 증빙할 수 있는 여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상속자가 피상속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증빙이 미비하거나, 혹은 서류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작품 이력 정보의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사전 작품이력과 관한 사항을 중점 검토하며, 그 외에 물납 대상의 정보, 미술학자의 연구 이력정보 등이 포함함

〈표 4-3〉 프랑스 미술품 물납 시 자료 제출 사항

서류내용	세부내용
물납 대상(사진)	미술품, 책 또는 문서
소장 이력	뮤지엄, 개인 소장 이력
저명한 미술사학자의 연구	물납 신청 대상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판단
경매 이력 및 낙찰 가격 등	물납 신청 대상의 경제적 가치 판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제출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필요 서류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자료 사례를 토대로 재분류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함
 - 영국의 경우 소장 정보 및 소장사항에 관한 정보가 중점적으로 검토됨
 - 프랑스의 경우 소장 이력과 역사적 가치판단 등이 포함됨
 - 일본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 외에 등록 미술품제도의 특성상 소장자 정보의 공개 사항 등이 추가됨
- 각 국가들이 요구하는 서류들의 경우 물납 신청자는 가격 가치나 예술적 가치 판단 등 가치판단에 대한 전문적 의견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역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각 국가들의 신청 요구 사항은 물납 대상의 현황정보, 물납 대상의 소장 정보, 물납 대상의 가격 가치, 물납 대상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 정보, 물납 대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물납의 신청자가 문화재 및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자료 전체에 대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이 아닌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물납 신청자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되, 물납 대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필수 정보의 경우 물납 신청자가 확인 가능한 정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물납 대상의 현황정보, 물납 대상의 사진, 영상 등의 이미지 정보, 물납 대상의 소장자 정보, 소장 이력정보, 소장 장소정보, 위탁 시 위탁정보, 그리고 가격 가치와 역사적 예술적 가치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할 수 있음

〈표 4-4〉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신청시 필요 자료 제출 사항, 국외 사례 비교에 따른 연구자 재정리

신청 서류의 분류	세부 항목
물납 대상정보	• 물납 대상의 현황정보 : 제목, 크기, 재료, 제작년도, 문화재 지정여부 등
	• 물납 대상 작가 정보 : 작가 성명, 출생년도 등
	• 물납 대상의 사진, 영상 등
	• 물납 대상의 활용정보 : 전시 도록, 달력, 작가의 카탈로그 레조네 등
	• 연관 작품 및 자료 등
	• 상태 보존 자료 등 기타 자료 등
소장정보	• 소장자 정보 : 소장자, 소장 권리 관계 등
	• 소장 이력 정보 : 소장 경위, 이전 소유자 등
	• 소장 장소 정보 : 소재지, 이동 가능여부 등
	• 위탁 시 위탁 기관 관련 정보 등
가격 가치	• 가격 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 구매가격, 유사 물품 비교 가격, 전문가 감정 가격 등
역사적 예술적 가치	• 역사적, 예술적 이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등

〈표 4-5〉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신청 시 필수 제출 사항 (연구자 정리)

신청 서류의 분류	세부 항목
물납 대상정보	• 물납 대상의 현황정보 : 제목, 크기, 재료, 제작년도, 문화재 지정여부 등
	• 물납 대상의 사진, 영상 등
소장정보	• 소장자 정보 : 소장자, 소장 권리 관계 등
	• 소장 이력 정보 : 소장 경위, 이전 소유자 등
	• 소장 장소 정보 : 소재지, 이동 가능여부 등
	• 위탁 시 위탁 기관 관련 정보 등
가격 가치	• 가격 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 구매가격, 유사 물품 비교 가격, 전문가 감정 가격 등
역사적 예술적 가치	• 역사적, 예술적 이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등

2) 물납 심의에 필요한 감정 자료의 포함 여부

- 민간 감정에 대한 물납 신청자의 평가 의뢰 및 감정서 증빙은 물납 심의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조사 사항, 평가 사항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의 의미가 있음
- 감정 기관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감정서의 제출은 이에 물납 심의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음
- 물납 신청자가 제시해야하는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에 관하여 가격 평가 및 가치 책정에 관한 감정을 별도로 민간 감정회사에 도움을 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감정 서상의 내용 기입과 필요 요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 감정 기관의 감정서는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감정의 근거는 감정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감정서만의 제출은 물납 심의상 가치 평가 및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하기 어려우므로 민간 감정기관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감정에 대한 책정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물납 신청에 따르는 감정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의 감정평가자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 사항의 경우 감정 전문가와 납세자, 물납 심의자가 이해관계에 의하여 가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평가자의 공개 및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4-6] 민간 감정기관의 감정서 사례



- 해외의 감정 업계에서는 감정자의 명사와 함께, 감정한 전문가의 감정 견해가 감정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물납제도상에서 민간 감정 기관의 감정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감정 제출물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

[그림 4-7] 국외 감정서 사례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1. 문화재 및 미술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적 체계 확립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기존의 물납제도가 환금성이 용이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의 한정된 물납 허용의 범위에서 상속세에 관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우수한 문화 유산을 국가가 보호 관리하고, 물납 문화재와 미술품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적 가치가 금전 가치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그러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전 가치와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를 보유하되, 뛰어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문화적 가치를 보유 하여야 하며, 이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활용 가치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시행하는 제도로 하고 할 수 있음

2. 부처 간 협력 제도로의 거버넌스 구축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는 근본적으로 상속세를 납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세무 관청인 국세청이 전체의 물납 체계를 소관하여야 함
- 그러나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은 납세의 기준에 문화재와 미술품이 지닌 특수한 성격이 고려, 검토되어야 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물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특히 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은 문화재청이 소관하고 있음에 따라 물납 대상 가운데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 납세 후의 물납 물품에 대한 처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이나 물납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문화 향유에 있으므로, 납세 후 물납 물품의 처리 및 활용 역시 물납제도 내에서 검토하여야 함
- 그러므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관여하는 부처가 단계별로 분리 운영하기 보다는 특정 물납 신청 대상에 대한 검토의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력에 기반한 심의 체제로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3. 물납제도의 단계적 체계 확대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마다 제도의 운영 주체, 운영 방식, 운영 정책 및 방향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별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함께 맞물려 있음
- 우리의 물납제도는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국외 사례를 도입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실정에 맞도록 조정,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
- 물납제도의 도입 후 시범적 운영을 통하여 물납 운영상 여러 쟁점을 도출하고 우리에 맞는 물납제도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물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단계적 수용 및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야 함

제2절 정책적 제언

1.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의 논의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자체적 가치가 뛰어난 미술품과 실제 국민의 향유 및 전시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문화재 및 미술품 구분이 필요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이 국민의 향유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기반 시설의 여건상 소장, 관리가 어렵거나, 혹은 기소장 미술품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유발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하여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를 운영하는 사례 국가인 영국의 경우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체계상 문화부장관이 물납 미술품의 관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혹은 물납 신청자가 특정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물납 미술품의 관리를 지정할 수도 있음
- 또한 물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미술품의 물납 신청 과정에서 전시 도록 혹은 달력 등 물납 대상이 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사전 검증하도록 유도함
- 프랑스의 경우도 영국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물납 미술품 심의 과정에서 학예사의 심의 의견을 청취함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함
- 일본의 경우 물납 미술품의 배치는 국가 미술품 등록 제도상 계약을 체결한 박물관, 미술관 등이 사전 결정되어 있음에 따라 배치하는 기관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 논의 완료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은 물납이 승인된 이후에는 선택을 돌리기 어려우며, 물납 승인 이후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문화 기반 시설에서 보존·관리 역량에 따라 활용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국가가 미술품을 보유할 때 활용처가 분명하고 활용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된 미술품이 모두 물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미술품이 물납되어 소장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가치가 충분할 경우 물납 신청자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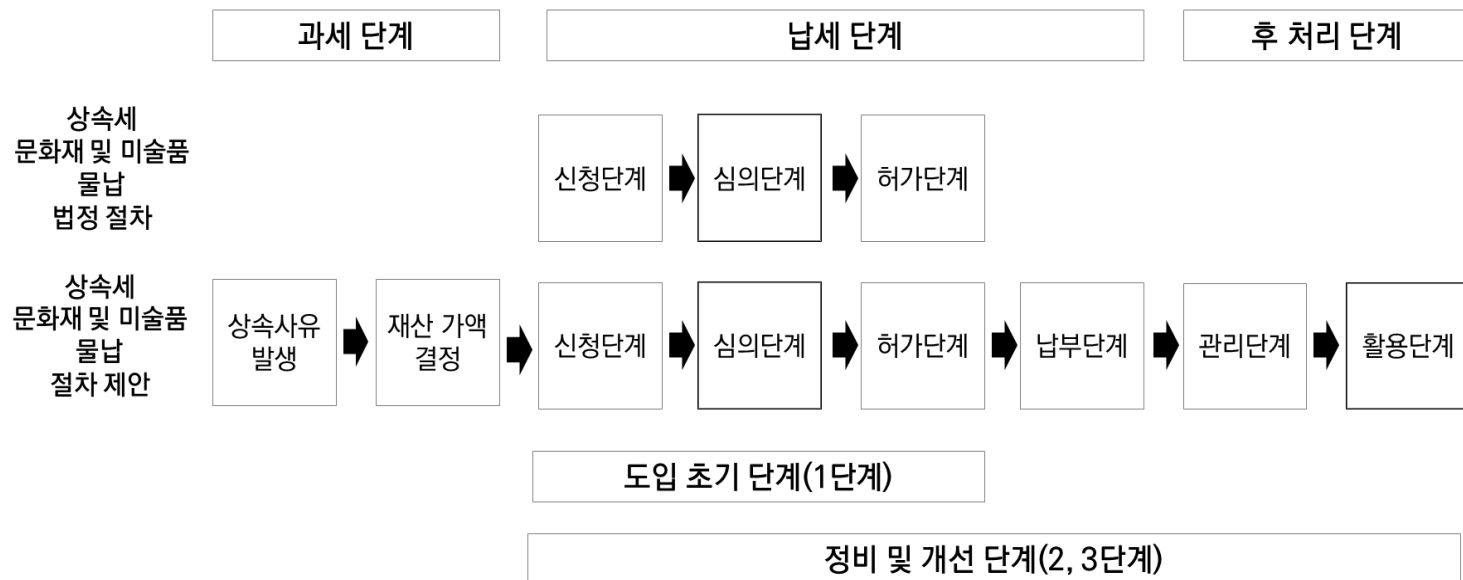
2. 물납 체계의 단계별 제도 개선

가. 물납 운영에 따른 발생 문제에 대한 개선 유연성 확보 필요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우려되는 사항은 예상하지 못한 쟁점의 등장에 관한 사항의 지속적 등장에 관한 사항이었음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속 개선, 발전하여 뛰어난 미술품이 물납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제도의 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성이 필요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엄격한 규제와 규정에 기반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물납의 신청은 용이하게 하되, 물납의 심의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물납제도의 시범적 운영을 운영하는 1단계, 물납제도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정비하는 2단계, 물납제도가 문화재 및 미술품의 외부 환경 변화를 수용하며 물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는 3단계로 단계화를 제안함
 - 1단계 : 물납제도의 도입에 따른 즉각적 개선 대응 단계로, 물납 신청자는 물납 신청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 자체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되, 물납의 심의 단계에서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즉각적 수정
 - 2단계 : 1단계의 주요 쟁점 가운데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쟁점들을 수합하여 수정 개선하는 단계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물납제도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제도 전반에 걸쳐 수정 개선하는 단계

- 3단계 : 물납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만들어진 2단계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외부 환경과 물납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

[그림 5-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 향후 범위 설정 방향 안



3. 물납제도 감정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심의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는 물납제도의 활성화
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물납 대상의 평가를 할 때 가치의 산정과 그에 대한 근거는 물납 신청단계에서 사전
제출되며 물납 심의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합당 여부를 검토하므로 물납 미술품에
대한 가치 평가에 관한 물납 신청자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가치는 현재의 미술 시장에서는 미술품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서를 받는 형태로 책정, 검토되고 있음
- 물납 심의 단계에서는 미술품 감정서의 가격이 합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미
술품 감정의 단계에서는 그동안 가치의 책정 결과를 통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
술품의 감정 책정의 근거와 감정 가격 책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의 조사 및 분석
사항 등이 포함되어 물납 심의 검토 자료로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 영국의 경우 물납제도 신청자에 한하여 대영박물관이 유사 감정 서비스인 오브젝
트 아이덴티피케이션(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를 통해 부서별 물납 신청물
품을 큐레이터나 전문가가 감정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사전 감정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되, 시가 감정평가는 하지 않고, 공식 감정 문서를 제공하지는 않음

〈표 5-1〉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부서별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비스 현황

부서명(국문)	세부내용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및 아메리카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품 조회 서비스(Collections Enquiry Service) 연구실이라 불리 는 연구실에서 서비스 진행 • 수집품 조회 서비스실은 소장 품목과 연관 있는 수집품의 조회나 연구 를 위한 목적으로 부서를 만날 수 있는 창구 • 월요일~금요일 10:00~12:00, 13:00~16:45 개방 • 사전예약 필수
고 이집트와 수단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일~금 14:00~16:30 연구실에서 진행 • 사전예약 필수, 약 2주전 예약 권고
아시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고미술품과 연관된 물품들의 감정과 일반적 조사 의뢰에 응함 • 제작시기와 역사적 의미 관련 견해 제공(시가감정 제외) • 전문가 견해를 얻기 위해 물품을 가지고 올 경우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인의 물품 통과허가를 신청해야 함

부서명(국문)	세부내용
중동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개방 시간동안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당일에도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얻을 수 있음 • 방문 시에 큐레이터가 없거나 다른 큐레이터나 부서의 견해가 필요할 경우 물품 보관 후 추후에 감정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사전예약 권고
선사시대 및 유럽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예약 필요없음 • 주중 14:00~16:30 연구실에 관련 물품을 가지고 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리스와 로마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에 14:00~16:00 사이 물품 지참 시, 서비스 가능
주화 및 메달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직접 가져올 경우 수령증이 부여되고 가능하면 당일에 서비스가 이루어짐 • 감정을 위해 우편으로 물품을 부서에 보낼 수 있음 • 1회 10개 이상의 물품 감정 의뢰 불가 • 평일 10:00~13:00, 14:15~16:00 개방 (수요일 오전 제외)
휴대 가능한 문화재 및 미술품 (보석 등의 보물)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미제공
프린트 및 드로잉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화나 드로잉, 수채화에 관한 서비스 제공 • 종이에 제작된 서양 작품만 감정 • 수요일 개방시간 10:00~13:00, 14:15~16:00에 실시

- 미국은 미술품 감정과 관련하여 주로 민간이 감정을 진행하나,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차원에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의 제도적 안정화와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물납제도 이전에 충분히 납세할 재산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함
- 프랑스의 경우 개별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진행하지만 국가가 감정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물납 신청자들이 감정의 의뢰 후 물납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미술품 감정을 제도적으로 용인하여 수요를 확대하고, 미술품 감정이 충분한 조사와, 검토,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4. 미술품 거래 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상속은 원 소유자의 사망하여 상속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세액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됨
- 원 소유자가 사망 이전에 상속 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상속세 납부의 기간 6개월 내에 조사증빙하기는 어려움
- 상속될 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나, 물납제도상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움
- 물납제도를 넘어 상속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미술품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관리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미술품 매매 거래 이력 정보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미술품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미술품의 보유기간 5년을 증빙하여야 하며 무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사전 미술품의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기 위하여 상속 사유 발생 이전에 미술품에 대한 거래 정보, 관련 정보 등을 미술품 등록 과정에서 사전 검증함
- 영국의 경우 미술품에 대한 자료를 상속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미술품에 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주로 미술품 물납을 하는 사례가 왕실 혹은 귀족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미술품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 물납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위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임
- 한국의 경우 근대 식민지배, 한국전쟁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다수의 시중 거래되는 미술품의 정보가 부재하는 경우가 많거나 잊혀지는 경우가 발생함
- 미술품에 대한 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속 이전 단계부터 물납 대상 미술품의 정보에 대한 관리를 장려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독일의 경우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은 물납도 가능하지만 개인 소장 문화재 및 미술

품에 대한 세금이 면제하도록 하여 미술품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함

- 프랑스도 미술품의 양도세 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술품의 투명한 거래를 통한 미술품 거래의 지원과 미술품 정보의 확보에 보다 초점을 둠
- 미술품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의 면제는 세금의 혜택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임
- 미술품의 이력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의 차원에서 미술정보 플랫폼인 아트시(Artsy)는 미술 컬렉터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아트시 웹 사이트에 상시 게재하고 거래 가격과 거래 이력 정보를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제 혜택과 같은 미술품 이력 정보를 위한 혜택 외에 미술품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올리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질 경우 물납의 평가와 심의, 양질의 미술품에 대한 물납의 유도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5. 물납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방안 마련

-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물납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는 물납을 통해 세제 혜택이 명확해야 양질의 미술품이 물납이 된다면, 물납제도의 실질적 혜택은 국민이 뛰어난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음으로부터 비롯됨
- 물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납된 미술품의 적극적 활용과, 국민의 물납제도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함
- 영국과 같이 물납제도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발간을 통한 물납 사실의 공표 및 내용의 공개의 방식, 혹은 프랑스와 같은 물납으로 인하여 피카소 미술관과 같은 물납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물납 대상 미술품의 활용 기관의 선정과 물납 미술품의 활용 시 해당 미술품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로 인하여 국가의 소장품이 되었으며, 국민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 Anastasia Tennant(2021), 「물납제도의 도입: 제도의 영향과 제도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시각예술 제도개선 세미나 자료집』, 한국화랑협회
- Bruno B daride(2013), ‘Comment utiliser la dation en paiement?’, Gestion de Fortune, 239, 2013.7.
- 기획재정부(2019), 「2019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 김미정(2015), 「해의 감정 프로그램 참가 및 리서치 지원 결과 보고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5.12.
- 김서현(2019), 「미술품 평가를 위한 기준」, 『2018 미국감정가협회 협력 프로그램 결과 자료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1-28.
- 김성혜(2020), 「미술 작품의 상업적 가치와 형성 체계 : 미술 시장을 중심으로」, 미술과 현장, 제 30호, 2020.12. 99-135
- 김은정(2016), 『부처 간 협업조정 기능 강화 및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다부처사업 운영체계 설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윤섭(2016), 「미국의 미술품 기증역사로 본 미술품 기증문화의 필요성 연구」, 『미국문화연구』, 동서미술문화학회, Vol. 8, No. 8. 101-126.
- 김윤섭(2017), 「미국 미술품의 기증사례 연구」, 『미국문화연구』, 동서미술문화학회, Vol. 11, No. 11. 167-195.
- 남궁술, 박광동(2008),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 비교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양지연, 김 캐서린, 손차혜, 윤정실(2020),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양지연(2021), 「미술품의 감정과 유통에 대한 이해」, 『작품의 가치, 신뢰를 같이』, (재)예술경영지원센터, 8-31.
- 양혜원, 김현경, 윤지연(2019), 『예술의 가치와 영향연구: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 결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현미(2017),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방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

41집

- 유두현(2019), 「소더비 랩(Sotheby's Lab) 과학연구부서」, 『2018 미국감정가협회 협력 프로그램 결과 자료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45-49.
- 이경택, 이지현, 김선영(2022), 「미술품 물납제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연구」, 『지역 문화』 vol.9. no.2., 한국지역 문화학회
- 이동기(2019), 「미술 관련 행정에서 미술품 평가제도 정책 연구」, 『국정관리연구』, 제 32권 1호.83-101
- 이정인, 이재경(2016), 「시각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예술 기부에서 조세지원의 효과」, Vol. 22, No.2.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이재경(2021),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의 도입」, 『입법과 정책』 vol.13.no.1., 국회입법조사처.
- 장인호(2021), 「문화재물납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도입방향에 관한 서론적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32권 제1호
- 전지윤(2018), 「전문성과 공신력에 기반을 둔 미국의 시가 감정 시스템 : 국제감정사협회(ISA)의 미술품 시가 감정 코스」, 『2017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정준모(2020), 「조세제도로 완성하는 보편적 문화복지국가」, 『상속세의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 최병식(2006), 「해외 미술품 감정 현황과 국내 미술품감정 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 미술품 감정 실태와 미술품 감정 진흥 방안』,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최병식(2006), 『한국 미술품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 문화관광부,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
-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고미술협회·한국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 2021. 3. 11.
- AIL, AIL PANEL MEMBERS, 2020. 08. Arts Council, Acceptance in Lieu offer item
- 池上健, 美術品の価格が分かると、国の文化度が上がる, 2020.01.29.
https://www.meiji.net/life/vol266_takeshi-ikegami/3
- Arts Council 홈페이지 <https://www.artscouncil.org.uk/>
- 영국 기프트에이드 홈페이지, <https://www.gov.uk/donating-to-charity/gift-aid>.
- 영국 예술 및 고미술품 딜러 협회 홈페이지, <https://lapada.org/code-of-practice/>

-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ifar.org/about.php>.
- 일본 아트평가보존협회 홈페이지, <https://ja2pa.or.jp/satei1>.
- 일본 도미감정평가기구 홈페이지, <https://toobi-tocfa.or.jp/overview/>.
-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https://www.bunka.go.jp/>.
- 일본 미연감정 홈페이지, <https://bikenkantei.co.jp/>.
- 일본양화상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yokyo.or.jp/jada/judge.html>.

ABSTRACT

A Study on the Payment In-kind System for Cultural Assets and Artworks

Ji Hye, Byun

Due to the amendment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2021, the artwork Payment In-kind System(APIK) will be introduced in Korea in 2023 to improve the quality of culture everyone enjoys by allowing outstanding artworks to be submitted instead of paying tax with money. Based on the amended law, this study sought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e new system for its implementation.

The APIK refers to allowing artwork as the payment in-kind(PIK) as one of the methods for the collection and payment of inheritance tax and paying national tax. Since liquidity is important for the payment of taxes, it has been rare. The artwork payment indicates the change of attitude that cultural values are suitable for tax payment values. Therefore, the valuation of artwork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the operation of the PIK.

This study examined the scope of artworks subject to payment in kind, the value standard of the object of PIK, and the valuation experts’ review into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e study analyzed the domestic deliberation and valuation system regarding artworks, drew issues through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that operate the APIK system, and examined area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nd improved. To introduce the system and settle it stably, the study proposed a direction for promoting the artwork as well as the composition and deliberation of the committee as the system operation. This study intended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artworks in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the APIK system and

suggested an inter-ministerial consultation system to reflect the involvement of several ministries.

Since the system is newly introduced, it must be improved in stages through various trials and errors, including the appraisal of artworks and efforts on transparency of art transaction history.

Keywords

acceptance in lieu, artful tax, Cultural Gift Scheme, Inheritance Tax, Payment In-kind, artwork Payment In-kind System

집필내역

연구책임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1장, 제3장 제2절, 제4장, 제5장 연구총괄

연구진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3장 제1절

이재경 건국대학교 상허대학 교양학부 교수: 제2장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관련 체계 연구

발행인 김 세 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2월 05일

발행일 2022년 12월 05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45-1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27>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변지혜·김혜인·이재경(202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관련 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27>



9 788960 359451
ISBN 978-89-6035-945-1